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 展望

1994. 12

許 文 寧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한반도에는 지금 탈냉전적 조류와 냉전적 조류가 교차하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진영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 한·소/한·중 수교에 따른 북방삼각관계의 동요, 한국에서의 문민정부 출현, 북한에서의 김일성 사망에 따라 탈냉전적 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지속, 북한에서의 父子權力 承繼와 혁명1세대 건재에 따라 냉전적 조류도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북한 지도부의 인식과 향후 북한 당국이 선택할 정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냉전기 북한 지도부가 가졌던 대외·대남 정세인식과 전환기 북한 지도부가 가졌던 대외·대남 정세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상의 변화와 지속 현황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과 같은 '唯一體制'에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세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金日成의 정세인식과 金正日의 정세인식간의 상이성과 유사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 최고지도부의 정세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터뷰와 같은 면접조사방식 또는 풍부한 1차자료에 대한 내용분석방식 등을 활용해야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지 북한의 공식적 문건과 일부 1차자료에 주로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학교 임용순 교수님의 조언과 북한연구실 연구원들의 토론에 의해 다소나마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북한 지도부에 대한 본 연구가 한국이 북한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통일·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994. 12

民族統一研究院

北 韓 研 究 室

要　　約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 지도부의 대외·대남 정세인식상의 변화와 지속을 분석하는데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에 기초하여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통일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한국의 통일·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1. 冷戰期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첫째, 대외 정세인식과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는 경제적 실리보다 政治的 理念(공산주의)에 비중을 두되, 政權의 自主性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예컨대 북한 지도부는 국제무대를 민주세력과 반동세력간의 투쟁이 전개되는 장으로 인식함에 따라 외교이념으로는 자주·친선·평화를, 외교노선으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외교관으로는 진영·자주·혁명·해방 외교관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소련을 사회주의 형제국가로, 중국을 혈맹으로, 일본을 군국주의 정권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인식하였으나, 동시에 상황에 따라 소련을 현대수정주의 국가로, 중국을 교조주의 국가로, 일본을 평화애호 인민의 국가로 인식하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또한 국제 경제와 안보의 위험은 자본주의적 제

국주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당분간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한시적 협조는 있을 것이나 제국주의 국가들은 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요컨대 북한 지도부는 국제질서에 대하여 양대 진영론적 입장과 革命·解放의 시각에서 인식하되, 反帝·自主를 정세인식의 시금석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대남 정세인식과 관련하여서도 북한 지도부는 '전조선혁명론'과 '하나의 조선론' 틀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이데올로기에 철저히 기초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예컨대 북한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자의 식민지'로, 남한 정부를 '괴뢰·파쇼 정권'으로 간주하였고, 남한 사회성격을 '식민지·반봉건 사회'로 규정하고 남한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통일원칙으로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통일전략으로서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 통일방법으로서 '평화와 비평화의 2가지 전도,' 통일노선으로서 '민주기지노선'과 '지역혁명노선' 그리고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 등을 설정하였다.

요컨대 북한 지도부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하여 '미제로부터의 민족해방'과 '괴뢰·파쇼 정권에 대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시각에서 인식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2. 轉換期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첫째, 소련의 개혁·개방화정책, 동구 사회주의진영의 붕괴, 독일통일, 한·소 수교 및 소련의 해체 그리고 한·중 수교 등 일련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지도부는 體制維持를 위하여 격리와 선별적 동일시, 그리고 동맹강화와 우리식 사회주의(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고수에의 의지를 강력히 표출함으로써 守舊的인 정세인식을 持續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둘째, 경제난·식량난의 지속적 심화 등 일련의 대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지도부는 經濟難 解決과 體制發展을 위해 제한적 개혁(자본주의 도입이 아닌 체제수호를 위한 개혁)과 부분적·점진적 개방(특정 지역에 한정되며, 동시에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방)의 필요성을 표출함으로써 改革的인 정세인식을 조심스럽게 摸索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셋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방외교 그리고 문민정부의 출범 등 일련의 대남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지도부는 한국 주도하의 흡수통일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지향적 태도와 공존지향적 태도를 동시에 표출하는 정세인식을 보여 주었다.

요컨대 1985년 3월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 이후 전개된 주요 환경변화(대외·대내·대남)에 대응하여 북한 지도부는 기존의 이데올로기 중시적 정세인식을 지속하되, 체제유지를 위한 현실적응적 정세인식(대외개방 및 대남공존의 필요성 인정 등)도 동시에 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3. 北韓 指導部 情勢認識의 變化와 持續

냉전기 및 전환기 북한 지도부 정세인식상의 변화와 지속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變化의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 지도부는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외교이념의 우선 순위를 '자주·친선·평화'에서 '자주·평화·친선'으로 바꾸었고, 외교노선에 있어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사회주의적 원칙과 동지적 협조의 정신'을 강조하였고, 외교관에 있어 세계혁명 추구적 외교관에서 國家利益 追求的 外交觀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대4국관에 있어 북한 지도부는 과거 이데올로기적 인식으로부터 다소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 대하여 '제국주의'로부터 '유일 초강국'으로, 소련에 대하여 '사회주의 형제국'으로부터 '사회주의 배신자'로 전환하였다. 중국에 대한 '혈맹'적 규정은 지속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국제경제관에 있어 북한 지도부는 現實認定的 認識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서방 자본주의의 발전을 인정하고, 대외무역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특히 과학·기술교류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넷째, 국제안보관에 있어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의 현실적 유용성의 한계와 국방·경제 병진노선 지속의 어려움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대남인식에 있어 북한 지도부는 공격적 성향으로부터 점차 방어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였고, 남한사회 성격에 대한 규정도 '식민지 반봉건사회'로부터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바꾸었다. 여섯째, 통일관에 있어 북한 지도부는 냉전기에 남한에 대한 자신감과 북한 주도의 통일가능성에 대한 높은 의지를 표출하였으나, 탈냉전기에 들어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와 對南 共存指向的 認識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持續의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는 '세계제국주의'와 사회주의진영간의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從屬論的 패러다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의 장래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는, 일부 사회주의의 실패는 '사회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와의

이념경쟁에 있어 사회주의의 우월성 및 종국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속하고 있다. 둘째, 대4국관에 있어 북한 지도부는 이데올로기적 인식을 지속하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 원인에 대한 군사적 요인 중시의 이데올로기적 해석,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고립·압살'적 이해, 일본에 대한 군국주의적 평가의 지속, 러시아의 체제변화와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경계 등이 그것이다. 셋째, 국제경제관과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는 자본주의의 파국적 결말이라는 레닌적 명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帝國主義의 弊害에 대하여서는 냉전기보다 더욱 비판적이며, 시장경제제도 확산에 대하여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외개방도 '자립적 민족경제'에 기초하여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종래의 '자력갱생' 노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국제안보관과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는 동서 평화공존적 인식보다는 전쟁불가피론적 인식을 지속하고 있으며, 동시에 군사력 강화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대남인식에 있어 북한 지도부는 남한을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시위하려는 미제의 경제적·정치적 기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김영삼 정부와 관련하여서는 '역대 군부독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적대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여섯째, 통일관에 있어 북한 지도부는「조국통일 3대원칙」,「고려연방제」,「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등 旣存의 統一觀을 지속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 지도부는 대외정세 및 대남관계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冷戰的 인식틀은 지속하고 있으나,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 상황 가운데 '체제유지 및 발전'이라는 최소 국가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추수적인' 脫冷戰的 인식태도를 동시에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세인식에 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과 같은 대내 체제개혁문제에 대하여서는 김일성보다 김정일이 훨씬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반면, 자본주의 국가와의 협력과 같은 대외 경제개방문제에 대하여서는 김정일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보수적·냉전적·경쟁적 인식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脫冷戰期 北韓의 政策 展望

앞에서 검토한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 현황에 대한 요약과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탈냉전기 북한 지도부의 情勢認識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관에 있어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인식을 명목적으로는 持續적으로 천명하되, 실제적으로는 다소 緩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적 국제질서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북한만이 사회주의 이데올로

기의 보루로 남아 자본주의진영과의 대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양대 진영론을 체제 유지를 위한 논리로 작동시켜 왔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반제·자주의 대외관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대남관에 있어서도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인식을 명목적으로 지속하되, 실제적으로는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냉전기 남한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우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탈냉전기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직면하여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시에 대내 체제결속을 위해 상대적 정통성 우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탈냉전기 북한은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즉 김정일 정권하에서는 名目상의 革命 追求와 實際상의 實利 追求의 二重的인 認識(대외: 이데올로기적 인식과 현실적응적 인식, 대남: 공존지향적 인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만 놓고 볼 때, 북한은 대담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 강화론'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직면한 과제(정권의 공고화와 경제난 해결·핵문제 해결과 대외관계

개선·국력의 상대적 열세 극복과 남북관계 재정립 등)의 압력 또한 크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정책 및 대남정책은 制限的 開放과 共存指向的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탈냉전기 북한(김정일 정권)은 對內 強硬·對外 宥和 기조하의 消極的 對內改革·積極的 對外經濟開放 政策을 채택하여 당면한 경제난과 외교난을 풀어감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대내정책에 있어서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노선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단계적 핵투명화 정책을 새로이 추진하고,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 및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되,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국제적 압력 및 대남체제경쟁의 부진을 호도하려 할 것이며, 경제난 타결과 대남교란을 위해 민간차원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5. 韓國의 對應政策 方向

한반도에는 지금 탈냉전적 국제조류와 냉전적 지역조류가 교차하고 있으며,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증대될수록, 남

북한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정립은 더욱 중요해진다.

첫째, 한국은 統一問題의 二重構造的 性格을 명확히 이해하고, 轉換期的 認識과 戰略的 思考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문제는 4000만 국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현상유지적 성격과 7000만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현상타파적 성격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민족문제임과 더불어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국제문제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환기적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북한의 대외·대남정책에 대하여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그 대응정책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구태의 상황의존적·제로섬 게임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지향적·넌 제로섬 게임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韓國型」통일모델을 설정하고, 최근 동북아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主體的·戰略的 對應政策을 추진하며, 주변 4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노력과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최대한 抑制하는 것을 통일대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 봉쇄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체제붕괴를 유도하고, 그 결과로서 한국주도의 흡수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통일모델」은 현실적으로 가

능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남북한간에 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만 높다. 반면에 북한을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포함시키는 참여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자주적 체제발전을 이끌어 내고, 그 결과로서 남북한간의 합의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는「통일모델」은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나, 남북한간에 평화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변 4국의 영향력 경쟁을 활용하는 통일·외교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은 통일대전략의 구체적 실천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韓半島問題의 국제화 비중을 낮추고 韓半島化 比重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북한의 의도분석으로부터 소극적 대응정책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客觀的 環境 分析으로부터 主體的·包括的 統一政策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상의 정책이 아닌 최적의 정책을 모색해야 하며, 선언적 통일정책과 실제적 통일정책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1988년「7·7선언」과「3단계 통일방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통일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증진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目　　次

第 Ⅰ 章　序　論 ····· 1

1. 研究 目的 ····· 1
2. 研究 方法 ····· 5

第 Ⅱ 章　冷戰期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 10

1. 對外觀 ····· 10
   가. 國際政治觀 ····· 10
   나. 對4國觀 ····· 18
   다. 國際經濟觀 ····· 25
   라. 國際安保觀 ····· 27
2. 對南觀 ····· 29
   가. 南韓觀 ····· 30
   나. 統一觀 ····· 32

第 Ⅲ 章　轉換期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 37

1. 主要 對外環境 變化에 대한 認識 ····· 37
   가.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化 政策 ····· 37

나. 東歐 社會主義體制의 變化 ····· 41
다. 獨逸統一 ····· 49
라. 韓·蘇 修交 및 蘇聯의 解體 ····· 51
마. 韓·中 修交 ····· 58
2. 主要 對內環境 變化에 대한 認識 ····· 60
가. 經濟·食糧難 深化 ····· 60
나. 改革·開放의 必要性 ····· 64
3. 主要 對南環境 變化에 대한 認識 ····· 72

第 Ⅳ 章 北韓 指導部 情勢認識의 變化와 持續: 金日成과 金正日 比較 ····· 75

1. 變化 ····· 75
가. 對外觀 ····· 75
나. 對南觀 ····· 83
2. 持續 ····· 87
가. 對外觀 ····· 87
나. 對南觀 ····· 98
3. 小結 ····· 101

第 Ⅴ 章 脫冷戰期 北韓의 政策 展望 ····· 104

1. 金正日 政權의 當面課題 ····· 104

가. 政權의 鞏固化와 經濟難 解決 ····· 104
나. 核問題 解決 및 對外關係 改善 ····· 106
다. 國力의 相對的 劣勢 克服과 南北關係 再定立 ··· 108
2. 金正日 政權의 政策 展望 ····· 110
가. 基本方向: 對內 強硬·對外 宥和 政策 ····· 110
나. 部門別 展望 ····· 112

第 Ⅵ 章 結論 ····· 125

1. 要約 ····· 125
2. 韓國의 對應政策 方向 ····· 130
가. 統一大戰略 樹立을 위한 3가지 前提 ····· 130
나. 統一大戰略의 基本方向 ····· 132
다. 統一大戰略의 具體的 實踐方向 ····· 135

第 I 章 序 論

1. 研究 目的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 지도부의 대외 정세인식상의 변화와 지속을 분석하는데 있다. 다른 하나는 이에 기초하여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통일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한국의 통일·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폐쇄적 정치체제인 북한의 대외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은 자료난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의 情勢認識 現況을 규명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정책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김일성 '유일영도체제' 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체제인 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와 같은 個人的 要因 외에도 사회적 요인·이데올로기적 요인·역사전통적 요인·정책결정과정적 요인·경제적 요인·국력 요인·국제체제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1] 한편 로제나우(James Rosenau) 교수는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1) Lloyd Jensen, *Explaining Foreign Policy* (N. J.: Prentice Hall, Inc., 1982).

크게 4가지[2]로 구분하고, 이들 변수들간의 영향력 우선 순위를 3가지 구분기준[3]에 의해 설정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같이 국토의 크기가 작고, 경제발전의 정도가 후진적이며, 정치체제가 폐쇄적인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個人變數(Individual Variable)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북한이 향후 개방체제가 되어도 개인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정세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둘째, 북한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構造的 要因과 狀況的 要因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의 결정은 김일성·김정일의 認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4] 정책

2) 로제나우 교수는 개인변수(역할변수), 정부변수, 사회변수, 체제변수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James N. Rosenau, "Pre-Theories & Theories of Foreign Policy,"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 Y.: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80), pp. 128~129.

3) 로제나우 교수는 국토의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정치체제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Ibid., p. 133.

4) 이러한 '이미지-정책결정간의 링크(link)'에 대한 분석경향은 보울딩(Kenneth Boulding)의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보울딩에 의하면 정책결정은 상황의 '객관적 사실'들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따른 상황규정(definition of situation)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Kenneth Boulding, "National Images & International System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Ⅲ (June 1959), pp. 120~121.

결정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근거하여 국제정세를 인식한다. 그리고 세계관은 장시간에 걸쳐 형성되며, 정책결정자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의 지배적인 신화와 사상 그리고 전통에 근거하여 형성된다.[5] 물론 개별 정책결정자의 정책결정 동기인 세계관과 정세인식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자료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정세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 방법[6]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김정일의 정세인식에 대한 연구는 쉽지는 않으나, 가능하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의 외교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김일성·김정일 및 고위 실무책임자 등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은 크게 '설명'(Explaining)과 '이해'(Understanding) 두 가지가 있다.[7] 전자는 外在的 觀點에서 국제체제에 의해 한 나라의 정책이 틀 지

5) Jensen, *Explaining Foreign Policy*, pp. 33~34.

6) 연설내용의 분석, 정치지도자의 특성과 동기를 그의 행동으로부터 유추하는 방법, 혹은 접근가능한 주제들에 대한 실험 및 인터뷰를 통하여 유사성과 비교점을 찾아내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Ibid., pp. 21~22.

7) Martin Hollis and Steve Smith,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N. Y.: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 1~15.

워지는 것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반면에 후자는 內在的 觀點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주어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이해하는 접근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이해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冷戰期[8] 북한 지도부는 어떠한 정세인식을 가졌는가? 북한이 냉전질서와 주변 4국(미국·일본·중국·소련) 그리고 국제경제질서와 안보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대외정세관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대남정세관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轉換期 북한 지도부는 주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정세를 인식하였는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동구 개혁·개방의 심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 독일통일, 한·소 수교와 소련의 해체, 한·중 수교 등과 같은 대외적 변화와 경제난의 심화, 개혁·개방의 필요성, 승계체

8) 이 글에서는 냉전기를 김일성 유일체제기(1948~1970년대), 전환기를 김일성·김정일 부자체제기(1980년대~1993), 탈냉전기를 김정일 일인체제기(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제의 확립, 김일성 사망과 같은 대내적 변화에 대하여 북한 지도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脫冷戰期 북한 지도부는 정세인식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와 지속을 보여주고 있는가? 냉전기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과 전환기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 사이의 변화적 측면과 지속적 측면을 구분해 볼 것이다.

넷째, 탈냉전기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정세인식 기반 위에 對外政策과 對南政策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북한이 향후 추진하게 될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적 내용을 전망해 볼 것이다.

다섯째,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韓國은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어떠한 통일·외교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가? 한국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통일대전략' 구상을 위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研究 方法

위와 같은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분석방법을 원용할 것이다. 첫째, 文獻分析 方法이다.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이름으로 발표된 주요 문건들을 분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최고지도부[9]의 당 대회와 주요 당 전원

회의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발표 문건, 기타 주요 행사시의 담화, 논설 등을 분석할 것이다. 북한 해당분야 실무책임자[10]의 경우 주요 행사시에 발표한 문건과 북한 전문학술지[11]에 발표한 논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건들에 언급된 북한의 정세인식은 북한의 대외·대남 인식을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많으나, 대내통합과 대외관계를 고려한 선전적 차원의 언명인 경우도 많음을 고려할 것이다.

둘째, 크렘리놀로지(Kremlinology) 분석방법이다.[12] 문헌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크렘리놀로지는 언론 매체에 의해서 보도된 상징교차(Sym-

9) 북한 최고지도부는 1960년대까지 김일성, 1970년대 이후 김일성·김정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정한다.

10) 북한의 실무책임자는 당의 국제비서, 대남비서, 경제비서 그리고 정무원의 총리, 외교부장, 대외경제위원장 또한 군의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등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정한다.

11) 「국제생활」, 「근로자」, 「경제연구」 등.

12) 크렘리놀로지(Kremlinology)란 '크렘린'(Kremlin)이라는 소련 권부의 상징 단어와 학문의 의미를 지닌 '올로지'(ology)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자고리아(Donald Zagoria) 교수에 의해 창안된 개념이다. 이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산권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도날드 자고리아, "대소·대중공관계," 김준엽·스칼라피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5), pp. 348~352.

bolic interaction), 의전절차, 성명이나 고위인사들의 대외메시지 등을 장기간에 걸쳐 분석함으로써 그 변화추이를 도출해내고 이를 통하여 외교정책상의 변화를 감지해내는 기법이다.[13] 북한은 체제유지의 한 방편으로서 공산권 국가들 중 가장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북한 지도부가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실만 보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크렘리놀로지 분석방법은 북한의 정세인식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크렘리놀로지 분석자료로는 1차자료로써 당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등의 일간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그리고 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 등의 방송매체를 활용할 것이다. 2차자료로는 「내외통신」(보도판), 「주간 북한동향」과 「월간 북한동향」 그리고 주요 국내일간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미국 상무성에서 출간하는 FBIS(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와 영국에서 나오는 Country Report (North Korea) 그리고 주변 4국의 주요 일간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2차자료에서 크렘리놀로지적 가치가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1차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정리할 것이다.

셋째, 面接調査 分析方法이다. 인텔리겐챠 출신의 귀순자

13) 김용호, "북한 외교정책연구에 있어 크렘리놀로지의 효용성 고찰," 「北韓硏究」 (1993 겨울), pp. 172.

들 가운데 대외정책 및 대남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던 인물들과의 인터뷰 또는 수기분석을 통하여 당시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을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북한의 고위직과 면접이 가능했던 인물들과의 인터뷰 또는 방북기 분석을 통하여 탈냉전기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을 추출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현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중국 고위 행정직 및 연구직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동시에, 북한과 가장 왕래가 빈번한 지역을 방문하여 최근 북한의 동향과 지도부의 정세인식을 파악할 것이다.[14]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명의로 발표된 문헌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분석·종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되, 이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크렘리놀로지적 분석방법과 면접조사 분석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들에 의해 북한 내부시각에서 탈냉전기 북한 정세인식의 변화와 지속 현황을 파악할 경우, 향후 북한 지도부의 정책선택 방향을 보다 현실성있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선전적 정책언명 또는 언론보도와 실제적 정책전개 양상의 구별을 가능케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통일·외교정책 개

14) 1994.5.19~28 기간 중국의 북경 및 연변한인자치주를 방문하였다.

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第 II 章 冷戰期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1. 對外觀

가. 國際政治觀

1) 國際秩序觀: 兩大 陣營論(反帝·自主)

북한은 '대외관계분야에서 확고히 견지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항일혁명투쟁'에 의하여 세워졌음을 주장한다.[15] 즉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외관계에서 확고히 견지한 자주적립장과 철저한 반제혁명적립장,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경험'들은 북한의 '자주, 친선, 평화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당과 정부의 대외정책의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억세고 튼튼한 력사적 뿌리'가 되었음을 북한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국제질서를 보는 북한의 입장은 김일성 정권의 유지와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을 우선적 목표로 하여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역사·중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15)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

러한 북한의 국제질서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일성은 陣營論的 立場에서 국제무대를 '민주세력과 반동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는 장으로 이해하였다.[16] 북한은 전후세계의 정치적 역량관계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帝國主義陣營(반동세력·반혁명역량·지배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國際民主陣營(민주세력·혁명역량·반제자주세력)으로 대별하는 한편, 점차 제국주의세력이 약화되고 민주세력이 결정적 우세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북한은 자본주의세계의 국제관계를 약소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침략과 정복,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약탈의 제국주의적 관계로 특징지웠다. 반면에 '민주주의진영' 국가들(공산주의국가들)간의 관계는 호상존중과 형제적 협조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proletariat internationalism)적 관계로 특징지웠다. 그리고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하에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단결하고 서로 도울 것을 주장하였다.[17]

---

16)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48.3.28),"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13~23.

17) 김일성,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조선인민의 투쟁 (1952.4.25),"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pp. 25~36;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630.

둘째, 북한은 사회주의진영 내의 의견대립과 갈등에 봉착하여 自主的 立場을 표방함으로써 주체성과 실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은 진영론에 근거하여 소련 및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후르시초프의 東西 平和共存 政策 등에 따른 중·소분쟁의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주의권의 분열,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 발생과 이로 인한 북·중간 긴장 국면의 조성에 대응하여 북한은 자위적 조치로써 대외관계에서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대국주의' 등에 대한 '자주노선'을 선언하였던 것이다.[18] 또한 북한은 1970년 11월에 열린 제5차 당대회에서 중·소분쟁의 격화와 공산권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일관된 대외정책을 전개할 수 없었음을 반성하는 한편, 사대주의·수정주의·교조주의에 대한 반대와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 대외정책 추진을 천명하였다.[19]

---

18)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10.5),"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pp. 168, 185.

1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 416~529.

2) 外交 理念: 自主·親善·平和

북한은 6차 당대회 이전까지 특정 외교이념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1966년 자주노선을 선언한 이후 대외관계에서 '자주'에 최고 우선 순위를 두어왔다. 즉 북한은 중·소분쟁시기에 自主性을 강조함으로써 시계추 외교를 통한 실리추구 정책을 분식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 이르러서 '자주·친선·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였다.[20]

이를 좀더 살펴보면[21], 북한은 자주의 이념을 견지하는 것이 대외활동의 근본원칙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 나감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권위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친선의 이념을 견지하는 것이 대외활동의 확고한 원칙임을 천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연대성을 튼튼히 함으로써 '조선혁명과

20)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4輯」(서울: 國土統一院, 1989), pp. 73~75.

21) 정동욱,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근로자」(1986.2), pp. 88~92; 고성순, "자주, 친선, 평화는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의 기본리념," 「근로자」(1987.2), pp. 92~96.

세계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평화의 이념을 견지하는 것이 대외활동의 일관된 원칙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여나감으로써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며,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3) 外交 路線: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북한은 각 나라들의 노동운동이 민족적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위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맑스-레닌주의당의 영도밑에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국제적으로 단결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22]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서 첫째,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나라 전체를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둘

22)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630~631.

째,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민족주의'를 배격하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4) 外交觀: 이데올로기 重視

냉전기 북한이 가졌던 외교관의 특징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陣營 外交觀을 가졌다.[23] 북한은 현존체제의 유지 및 발전('사회주의 건설 및 완전 승리')을 위하여 '반혁명세력'으로부터의 安全을 확보하려는 외교관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1953.10.1),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1960.1.19)과 「한·일 기본조약」 체결(1965.6.22)에 따라 남한과 '미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간의 南方三角關係가 형성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중·소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1950.2.14)을 토대로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1961.7.6)과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을 통하여 北方三角關係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진영론에 근거하여 ① 자주성과 프롤레타

23) 許文寧,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6~21.

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강화, ② 비동맹 제3세계 나라들과의 국가관계 발전 및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단결과 협조의 강화, ③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우호관계 형성 및 경제·문화교류의 발전, ④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시아 나라들과의 선린관계 발전을 위한 내왕과 접촉의 강화 및 경제·문화교류와 협조의 발전 등을 주장하였다.[24]

둘째, 북한은 自主 外交觀을 가졌다.[25] 냉전기 북한은 중·소분쟁 상황하에서 '지배주의' 및 '패권주의'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자주 외교[26]를 내세움으로써 김일성 정권의 공고화를 추구하였다. 중·소분쟁과 이에 따른 중·소간 대북 견인경쟁의 심화는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화시켰는 바, 북

24) 김일성, "조선로동당 6차대회 사업총화보고,"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4輯」, p. 73.

25) 북한은 지난 40여 년 간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自主性에 근거한 等距離 外交를 전개해오기보다는, 김일성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時計錘 外交를 전개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26) 북한은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외교에서의 자주'를 선언하였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매개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매개 당의 신성한 권리이며 매개 당은 또한 다른 형제 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20」, p. 406.

한은 중국과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이 북한의 입장과 어긋날 경우 국가목표와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27]

셋째, 북한은 革命 外交觀을 가졌다.[28]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완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29] 그리고 이를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반제 연대 및 아프리카·아시아 신생국가들과의 반식민지 연대를 통한 국제혁명역량의 단결 강화를 추구해왔던 것이다.

넷째, 북한은 解放 外交觀을 가졌다.[30] 북한은 '하나의 조

---

27) 許文寧,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pp. 6~21.

28) 김일성은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4輯」, p. 72.

29) "〈우리 혁명은 국제혁명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혁명에 충직한 것이 곧 국제혁명운동에서 자기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리론은 매개나라 인민들이 자기나라 혁명을 잘하여 나라의 정치·경제·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에 다같이 충실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19~220.

선' 정책을 내세워 정통성 있는 정부인 북한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해야 함을 주장하는[31] 한편, '조국통일'(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하여 先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애국정권 수립 등의 제조건 이행, 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을 해야할 것임을 선전해왔다. 요컨대 냉전기 북한은 진영·자주·혁명·해방의 논리에 기초한 외교관을 가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나. 對4國觀

1) 對蘇聯觀: 社會主義 兄弟國과 大國(現代修正)主義

첫째, 북한은 소련을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형제국' 또는 '친선적 인방'으로 규정하였다.[32] 1950년대 북한은 소련의 정치·경제·군사원조에 의해 건설됨에 따라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은 소련을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1980년대 미·일·중 3각협력체제 등

30)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pp. 240~247.

3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185~191.

32)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p. 4.

장에 대항하여 북·소 동맹관계가 강화되었을 때, 북한은 소련을 '친선적 인방'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둘째, 북한은 소련을 또한 '대국주의'와 '현대수정주의'로 비판하였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노선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두하자, 1955년 김일성은 '당 사업에서 주체'를 내세워 소련 추종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政敵인 소련파와 연안파를 제거하였다.[33] 또한 북한은 1960년대 들어와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이 중단되자,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를 내세워 자주국방체제를 추진하였다.[34] 그리고 1962년 10월 28일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에서 소련의 대국주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35] 1966년 8월 「로동신문」 사설 "자

33)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1955.12.19)."

34)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35) "원조를 준다는 자만심으로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무관하다. 자본주의 나라간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조건이 붙어 있는 '원조,' 내정간섭을 전제로 한 '원조'는 사회주의 나라간에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나라의 원조는 그것을 받는 각각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강고히 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발전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10.28 사설.

주성을 옹호하자"에서 소련 공산당의 대국주의적 간섭에 대해 거듭 비판하였다.[36] 또한 동 사설에서 북한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규정하고, 반제·반미주의와 반수정주의는 동일한 것이며, 반제 투쟁보다 반수정주의 투쟁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2) 對中國觀: 血盟과 教條(左傾機會)主義

첫째, 북한은 중국을 공식적으로는 '혁명적 전우,' '혈맹'[37] 또는 '형제적 인방'[38]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중국관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36) "최근 연간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기의 그릇된 노선과 견해를 다른 형제당들에 강요하며 이것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등 참을 수 없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국주의적 행동을 허용하지 말아야한다. 대국주의는 형제당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국주의는 원래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다."

37) "두 나라 지도자들이 늘 말하여온 바와 같이 조·중 두나라, 두인민들 사이의 관계는 말 그대로 뗄 수 없는 순치의 관계이며, 혁명적 전우의 관계이며 피로써 맺어진 혈연적관계입니다." (김일성의 성도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82.9.21) 조선중앙통신사 편,「조선중앙년감 198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 99.

38) 사회과학출판사 편,「정치사전」, p. 1063.

소생한데 기인한다. 그리고 양국이 사회주의 국가건설 시기와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 비슷하며, 일방이 지시하고 타방이 복종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데 기인한다.

둘째, 북한은 중국을 '교조주의'[39] 또는 '좌경기회주의'[40]로 비판도 하였다. 북한은 1966년 월맹지원을 위한 소련의 연합전선결성제의를 중국이 수락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1967년 1월 文化大革命의 와중에 홍위병을 동원하여 김일성을 '살찐 수정주의자,' '흐루시초프의 제자' 등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1968년 3월과 12월 양국국경이 폐쇄되고, 1967년 말과 1968년 12월, 1969년 3월에 백두산 영유권을 둘러싸고 양국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던 것이다.[41]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한은 중국을 '교조주의'

39) 「로동신문」, 1964.12.3;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966.10.5)."

40)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함께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좌경기회주의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 명제들을 교조주의적으로 되풀이하며 초혁명적인 구호를 들고 사람들을 극단적인 행동에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당을 군중으로부터 리탈시키며 혁명력량을 분렬시키며 주되는 적에 공격을 집중할수 없게 합니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p. 169.

41)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서울: 법문사, 1985), pp. 143~148.

또는 '좌경기회주의'로 비난하였던 것이다.

3) 對日本觀: 軍國主義 政權과 平和愛護 人民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도 二重的 觀點을 보여주었다. 첫째, 북한은 일본정부를 '군국주의 정권' 또는 '반동정권'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일본을 미국의 피점령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하여 군국주의를 재생시킴으로써 아세아 침략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북한은 '미 제국주의'의 사주에 의해 일본 군국주의가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42]

둘째, 북한은 일본인민을 군국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평화애호 인민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평화를 애호하는 일본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견제하고,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극동의 평화유지를 이룰 수

42) "조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또 다시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하려는 술책으로 일본을 다시 조선과 아세아 대륙을 침범하는 데 도구로 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자의 주구인 일본의 반동적 지배층들은 미제 강점자들의 조종하에 과거 일본 군벌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험을 되풀이 하기 위하여 국내에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며 재무장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조선 정전축하 일본 인민평화친선 사절단 접견석상 연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4~5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5), p. 15.

있는 것으로 북한은 주장하였다. 북한은 대일관계에 있어 人民外交(people's diplomacy) 추진을 정권초기부터 보여주었다.[43]

셋째, 북한은 일본과의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는바, 일본을 주요한 대외경제교류 파트너로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44]

4) 對美國觀: 帝國主義

첫째, 북한은 미국을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45]이자 '세계제국주의의 두목'[46]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국가로 형성된 18세기 말 이래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114차례의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8,600여 차례 군사적 간섭행위를

---

43) 북한은 일본의 '인민'이 '국제 평화민주대렬에 튼튼히 서서' '미제국주의'와 '일본 반동 지배층' 그리고 '이승만 매국역도' 타도에 나설 것을 주장함으로써 인민외교의 맹아적 모습을 정권초기에 보여주었다. 위의 글, pp. 15~16.

44) 허문영, "북한의 대일본정책," (단국대 미소연구소 1994년 발표논문), pp. 41~42.

45)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413.

46)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968.9.7),"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p. 228.

감행하였던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1840년대부터 한반도 침략을 꿈꾸었으며, 1866년 「셔먼호」로 침략의 첫걸음을 내딛고, 1950년에는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47] 즉 북한은 미국을 자신의 정권에 위협을 주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분할을 획책하고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야만적 침략자로 비난하는 자세를 지속하였다.[48]

둘째, 북한은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한 이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49] 그리고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멸망은 역사발전의 법칙이며 기본추세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세계에서

47)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413.

48) "미 제국주의자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입니다. 미 제국주의는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국제긴장상태의 격화와 군비경쟁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미 제국주의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미 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 것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68), 이한 엮음,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 (상)」 (서울: 온누리, 1989), p. 309.

49)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415.

'미제'의 지배적 지위는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북한은 '미제'가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50] 예컨대 미국이 곤란할 때는 「평화」의 간판을 들고 나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준비를 계속하는 양면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 國際經濟觀

첫째, 북한은 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도 멀지않아 멸망할 것이며,[51] '제국주의의 멸망은 역사발전의 객관적 법칙'[52]으로

50) 김일성,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pp. 316~317.

51) "낡은 봉건사회가 멸망하고 새로운 자본주의사회가 발생발전한 것처럼 자기세기를 다 산 자본주의제도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제도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것은 막아낼 수 없는 사회발전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칙에 의하여 오늘은 아직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듯이 보이는 미제국주의도 멀지않아 멸망하고야 말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2」, pp. 260~261,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1092에서 재인용.

52)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 p. 79,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1092에서 재인용.

서 인식하였던 것이다.

둘째, 북한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상호원조'와 '친선관계'를 제3세계에 대한 약탈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53] 그리고 "제국주의 세계내부에서 정치, 경제적 위기는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시장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은 더욱 날카로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54]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에 대한 북한의 이와 같은 입장은 국제정치를 본질적으로 해방과 혁명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기인한다.

---

53) "…우리는 자본주의국가들 간에 각종 쁠럭과 동맹의 형태로 어떤 「호상원조」와 같은 「친선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이미 분할된 세계를 재분할하여 초과 리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제 3국을 찢어 먹기위하여 림시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이다. 우리는 사나운 이리떼들도 서로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그들의 로획물을 나누어 먹는 때가 잇는 것을 보게된다. 그러나 그들에 먹을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라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은 당장에 서로 물고 뜯게된다. 이것은 오늘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있는 변함없는 기본적 호상관계의 형태이며 진리이다." 「김일성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 236,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102에서 재인용.

54)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 pp. 325~326,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1092에서 재인용.

라. 國際安保觀

첫째, 북한은 戰爭에 대해 이중적 인식을 가졌다. 북한은 전쟁을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55]으로 보면서,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 '침략전쟁과 해방전쟁'[56]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북한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전쟁의 근본원인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은 '미제국주의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국제긴장상태의 격화와 군비경쟁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미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들과 신생독립국가를 반대하여 「특수전쟁」과 「국부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전면전쟁 도발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였다.[57]

셋째, 북한은 軍備增強을 '세계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예컨대 '국방력을 강화하는

55) 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p. 11,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744에서 재인용.

56) 위의 책, p. 139.

57)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p. 744~745.

것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 당앞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였다.[58] 또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이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였다.'[59] 따라서 북한은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60]

넷째, 북한은 '미 제국주의'와 이로부터 연유하는 '일본 군국주의' 그리고 '남조선 파쇼정권'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감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소련의 팽창주의 및 중국의 대국주의로부터도 간접적인 위협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큰 당과 작은 당은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는바, 이는 중국과 소련에 대한 위협인식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61]

다섯째, 북한은 핵무기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주한미군 핵무기에 대하여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다.[62] 따라서 북한은

58)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 p. 437.

59) 1954.12.23. 인민군 군정 간부회의 김일성 연설.

60)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강화 문제,"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3」, pp. 157~163.

61)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 346~347.

남한 핵무기가 해결되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63]

2. 對南觀

김일성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문제를 야기시킨 역사적 근원으로서 '미군의 남한 강점'과 식민지통치 지속을 상정하였다.[64] 따라서 김일성은 이의 타파를 위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65]

---

62) "남조선에는 핵폭탄을 비롯한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전개되어 있으며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의 밀도는 나토성원국들에 전개된 핵무기의 밀도보다 4배나 높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각종 핵무기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전쟁 연습고동을 빈번히 벌리고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29.

63) "남조선에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조선인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나라 인민들이 핵위협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로동신문」, 1986.6.24.

64)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장애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않고는 남조선 인민들이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 p. 389.

가. 南韓觀

첫째, 북한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자의 식민지'[66]로 규정하고, 남한 정부를 '괴뢰·파쇼 정권'[67] 또는 '반인민적 반동정권'[68]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북한은 남한 사회성격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남한 사회가 '미제국주의로 부터의 민족해방'과 '괴뢰·파쇼정권에 대한 인민민주주의 혁명'[69]을 달성하

---

65) 김일성의 혁명통일론의 근거가 되는 정세평가에 대해서는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3~18.

66)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괴뢰정권을 통하여 그리고 이른바 「원조」를 미끼로 하여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부분을 자기 손에 틀어지였다." 「김일성저작선집 4」, p. 230.

67) "남조선「정권」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의하여 꾸며진 괴뢰정권으로서 미국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책, pp. 229~230.

68) "공화국정권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면 남조선괴뢰정권은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라는 사실도 더는 숨길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 p. 193.

69)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위의 책, p. 479.

기 위하여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70]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우선시되는 혁명의 대상은 '미제'로 간주하였다.[71]

셋째,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주요 동력으로서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 일부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설정하였다.[72]

---

70)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모순에 의하여 생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며 그것은 전체 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 p. 301.

71)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실제적 통치자이며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호밑에 남조선인민들을 억압하며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 pp. 479~480.

72) 위의 책, pp. 479~480.

나. 統一觀

첫째, 북한은 統一問題를 '전조선혁명론'[73]과 '하나의 조선론'[74]의 틀 속에서 이해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문제를 단순히 분산된 민족사회를 재통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제'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다.[75] 북한은 민족해방을 통하

73) 김일성은 "자신의 항일무장 혁명기를 회상하면서 그가 북한의 인민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고 그 해방된 조국의 북반부에는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했으므로 이제 그의 여생의 남은 과제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남한의 인민을 해방하여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서대숙, "북한은 어디로: 김일성 이후의 북한의 변화," 「계간 사상」 (1989 가을), pp. 105~106.

74) 북한은 "남조선에 수립된 역대 정치기구는 신식민주의 통치를 가리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으며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권"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남한은 독자적 주권을 갖는 국가적 실체가 아니며, 한반도에는 오직 '하나의 조국,'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p. 36.

75) "조국통일은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단순한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거족적인 사업이다. 남조선혁명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조선혁명의 일부분으로서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은 서로 불가분의

여 '민족적 모순'을 해결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면 남한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인민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될 때, 남북한 인민정부간에 평화적 협상을 통하여 통일이 가능하며, 비로소 '전조선혁명'은 완성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76] 그리고 북한은 통일을 1민족 2국가를 1민족 1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1국가를 통일된 1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였다.[77]

둘째, 북한은 統一原則으로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자주'의 원칙을 '반외세 자주화'로 인식하고,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를 주장하였다.[78] 그리고 '평화'의 원칙을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의 1975년 연설, 통일원, 「통일백서 1990」, p. 252.

76) "조국통일은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단순한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거족적인 사업이다. 남조선혁명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 조선혁명의 일부분으로서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은 서로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책, p. 252.

77) 김세균, "통일정책,"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645.

78) "털어놓고 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 나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에 의한 통일방법으로 인식하면서도,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혁명투쟁 방식의 남한체제 전복활동을 공공연히 선동하였다. 또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대해서는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대단결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반공정책 포기와 공산주의 활동 용납을 주장하였다.

셋째, 북한은 統一問題 解決順序를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공산화)통일'로 인식하였다. 북한은 남조선혁명[79]을 '남조선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어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하고 있다.[80]

넷째, 북한은 統一方法에 '평화적 방법(전도)과 비평화적 방법'의 두 가지 길[81]이 있으며, 이를 위해 '3대혁명역량'을

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일성, "일본 「매일」신문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이한 엮음,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 p. 375.

79) "남조선혁명은 아직도 외래 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우리 나라 영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 p. 299.

80)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pp. 4~5.

81) "우리 혁명에는 두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평화적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82]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남한 당국이 「조국통일 3원칙과 5대강령」을 접수하거나, 반제·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거나, 「남조선혁명」이 승리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미국이 북침하거나, 미국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남한의 혁명정세가 고양될 경우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조국통일」이 가능한 6가지의 경우를 제시하였다.[83]

다섯째, 북한은 統一路線으로서 해방 직후 '혁명적 민주기지'[84] 노선을,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역혁명노선'[85]을 강

으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의 전도요, 큰 전쟁으로 인하여 제국주의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조건하에서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전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 p. 573.

82)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결국 3대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 p. 239.

83)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pp. 264~271.

84)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이란 '조국통일'에 있어 북한의 혁명역량(정치·경제·군사적)과 그의 역할만을 결정적인 '담보'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남한지역에 혁명을 확산하거나 무력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혁명노선'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3대혁명역량 강화론'[86]을 제기하였다.

85) 196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혁명론'은 '지역혁명론'으로서 남한의 혁명역량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남한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과의 합작에 의해서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된다는 노선이다.

86) 「김일성저작선집 4」, p. 239.

第 Ⅲ 章 轉換期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1. 主要 對外環境 變化에 대한 認識

가.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化 政策

1985년 3월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1987년 1월 당 중앙위원회 보고를 통해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혁명적 재편 또는 개혁)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공개성 또는 개방) 그리고 노보에 므이슬레니에(noboe mishellene: 신사고)[87]를 정책기조로 천명하고, 소련 정책 전 분야를 이에 기초하여 추진하였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재정립, 당의 재편성, 탈관료주의화와 분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과 사회주의하의 소유권, 계획과 그와 관련된 경영 구조의 역할, 인센티브 체계와 사회주의적 시장의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신사고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평화공존론을 신외교정책

87) '신사고'라는 개념은 고르바초프가 1986년 1월 15일 핵무기 완전제거를 언급하던 당시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27차 당대회 보고 및 볼세비키 혁명 70주년 기념연설인 '10월 혁명과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 발전되었다. 그 뒤 고르바초프의 저술인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Perestroika and New Thinking)에서 이 개념이 완전하게 체계화되었다.

으로 추진하였다.[88]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울 수 있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소련의 정치·경제적 개혁정책에 대하여 상세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북한과 소련의 상황을 差別化하여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89] 이와 같은 북한의 인식은 소련 공산당 제29차 대회를 보도하는 노동신문의 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90] 당시 노동신문은 소련 공산당의 역할 약화, 당대회 사이에 당 관료의 20%가 교체된 정치적 개혁, 복수 후보제와 공개토론, 협동조합법, 가격개혁, 기업의 자율 등의 경제적 개혁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북한의 주요 잡지인 「근로자」와 「국제생활」을 살펴

88) "소련 공산당 신강령," 「중·소연구」 제10권 제2호 (1986 가을), p. 254. 신사고 외교정책의 기본적 이론들은 현대세계의 정의, 서로 다른 양 정치·사회체제 사이의 관계, 전쟁과 평화의 문제, 제3세계 상황, 사회주의 국가 및 공산당 사이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89) 1986년 3월 소련 공산당 제27차 대회에서 강성산 북한 총리는 소련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이와 같은 변화가 북한에 필요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조선 인민은 김일성의 영도하에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뭉쳐'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일성 또한 1986년 10월 모스크바 방문시 소련의 경제개혁에 대해 상세한 언급을 회피하고, 국제정세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등을 강조함으로써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격리적 인식을 표출하였다.

90) 「로동신문」, 1988.6.30.

볼 때,[91] 북한은 1989년 이후 사회주의 형제당들에 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주의권 변혁의 영향으로부터 국내체제를 격리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92]

둘째, 북한은 소련의 개혁이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이를 支持하였다. 북한은 소련의 개혁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별로 천명하지 않았으나, 1990년에는 노동신문('조·소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35주년 기념 논평)을 통하여 소련의 개혁을 지지하였던 것이다.[93]

셋째, 북한 지도부는 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에 대해서 選別的으로 동일시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소련의 해

---

91) 오유석, "북한잡지를 통해 본 북한사회 변화추세 연구," 「북한·통일 연구논문집(Ⅳ)」 (서울: 통일원, 1991), p. 464.

92) 1985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론설기조)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한편, 상대적으로 현재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을 계속하여 홍보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천명하면서 전체 주민들에게 북한체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93) "오늘 소련인민은 소련공산당 제27차대회와 제19차 전연맹대표자회 결정에 따라 사회주의의 갱신을 위한 개편사업을 심화시키고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 소련인민이 이룩하고 있는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 "조소 친선의 중요한 계기," 「로동신문」, 1990.2.5.

외철군 및 병력감축시도, 세계 여러 지역의 비핵지대화 추구 등의 평화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선별적 동일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넷째, 그러나 동시에 兩大 陣營論에 입각한 자신들의 국제정세관을 고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김일성은 1986년 1월 평양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고 있고, 핵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남한은 핵전쟁의 가장 위험한 온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94]고 주장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책략때문에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세계평화와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였다"[95]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소련의 새로운 정책, 페레스트로이카 등에 대한 1980년대 북한의 인식은 격리와 선별적인 동일시로 특징지울 수 있다.[96] 그러나 소련의 개혁·개방 지향적인 신사고적 세계관과 북한의 보수·이념 지향적인 주체사상적 세계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와 김정일

94) *Pyongyang Times*, 1986.1.18; 2.25.

95) 「로동신문」, 1988.6.30.

96) 하용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북한의 대응," 전인영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236~261.

은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북한에서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김정일은 사상생활의 계급적 성격을 제시하고, 사상의 자유는 부르조아 반동사상의 강요라고 주장하였다.[97]

나. 東歐 社會主義體制의 變化

1988년 3월 18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5일간의 유고슬라비아 공식방문을 마치면서, 유고 연방간부회의 의장「라자르 모이소프」와 공동명의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나

97) "그러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계급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각이한 사상과 사조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현상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사상의 자유라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 사회는 그 본성으로부터 로동계급의혁명, 사상의 유일적인 지배를 요구합니다. 낡은 사상을 낳은 사회경제적 기초가 청산되고 계급적 대립이 없어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합법칙적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부르조아 자유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362~363.

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신베오그라드」 선언을 발표하였다.[98] 이에 따라 동구 사회주의진영은 '제한주권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사회주의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한 이래 헝가리(1989.2.1)를 필두로 한국과 수교의 길에 나섰다.[99]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세계사적 변화에 동참하는 인식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守舊的 認識으로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한국과 수교하려는 헝가리의 결정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98) 「신베오그라드 선언」은 1955년 당시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베오그라드를 방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추진해온 독자노선을 인정하면서 발표한 「베오그라드 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1968년 9월 체코의 노선이탈 조짐에 대해 소련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브레즈네프」가 주창한 「제한주권론」(브레즈네프 독트린)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이 선언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실정에 적합한 발전노선을 독자적으로 채택할 권리를 가지며 소련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자결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선언 전문은 「사회주의 대변혁 핵심문헌 50선」 (서울: 新東亞, 1991), pp. 93~101.

99) 폴란드(1988.11.1), 유고(1989.12.27), 체코(1990.3.22), 불가리아(1990.3.23), 루마니아(1990.3.30). 「외교백서」 (서울: 외무부, 1991), p. 55.

배신감을 표출하였다.[100]

둘째, 북한은 1989년 12월 22일「로동신문」사설을 통하여 1985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그들의 批判的인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북한은 동 사설에서 동구사태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구인민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장의 해이, 즉 사상의 빈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부분적 비판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당의 단결과 사상사업에 대한 강화를 강조하였다.[101]

---

100) "마르크스는 모든 국가와 로동계급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이 형제적인 계급적 유대를 무시할 때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국제로동계급의 공동의 과업에 대해서도 심각한 해를 입히게 될것임을 경고했다… 헝가리가 범한 실수는 단순히 경제에 관련된 실용주의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와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과업에 대한 심각한 배반행위로서 간주되어야 한다."「조선중앙방송」, 1988.9.19. 북한은 이때까지만 해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나, 동구 사회주의가 완전히 변화되고 소련이 해체되자,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1992년 개정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101)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어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들 속에서 열의가 떨어지고 사회생활에서 이러저러한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 사회주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소홀히 한데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로동신문」, 1989.12.22.

셋째, 북한은 1990년 1월 「국제생활」에 실린 문건[102]을 통하여 1985년 이후 국제정세에 대한 批判的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 문건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기를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공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정치시사란의 대폭 강화를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공세책동을 폭로'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주의권의 자주적 투쟁 고수를 선전하였다.

넷째, 북한은 외부의 변화압력에 대하여 1989년 10월호 「근로자」에서 발표된 문건[103]을 통하여 '우리 식대로 살자'는 전략을 내세워 대응하였다. 즉 主體思想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주체사상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축으로 하여 재구성하고, 물질에 대한 정신의

102)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국제생활」, (1990.1) (평양: 국제생활사, 1990), pp. 12~22.

103) "복잡하게 조성되는 혁명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힘차게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갈 데 대한 당의 혁명적 방침을 빛나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혁명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게 조성된다 하더라도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과 립장, 주체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고학천, "우리 식대로 살아 가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1989.10), p. 19.

우월, 장수원망, 일족주의 등 북한사회의 전통적 사상을 적극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득력, 조선로동당 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 지배의 정통성 강화를 도모해왔다.[104]

동구 사회주의체제 변화에 대한 북한 최고지도부,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을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서 인식하였다.[105]

---

104) 사카이 다카시, "북한의 정치개혁 가시화되고 있다,"「사회와 사상」(1990.5).

105) 김일성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평화적 이행」전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원조」를 미끼로 하여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사회주의 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려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로동신문」, 1990.5.25.
또한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평화적 이행」의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의 길로 되돌려세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주장하였고, 1992년 신년사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식민주의체계를 부활시켜 제국주의의 세계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정치적 압력·위협과 경제적 매수·예속

둘째, 김일성은 수구적인 '사회주의의 고수'를 통해서만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제국주의 진영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로 되돌리려는 제국주의의 음모'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당제 및 다원주의에 대한 강요에 대해서는 일당독재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도입 강요에 대해서는 북한형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고수해야 하고, 자유사상의 유입에 대해서는 사상문화의 침투를 철저하게 봉쇄해야 하며, 서방의 원조 및 협조 제안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로의 문을 열기 위한 미끼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106]

셋째, 김일성은 사회주의 승리의 歷史的 必然性에 대한 확신을 지속하였다.[107]

그리고 사상문화적 타락 등의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06)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1.1.1.

107) "사회주의에로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인것 만큼 전진도상에서 예상치 않던 사변에 부닥칠 수 있으며,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도 변천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반드시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0.1.1.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닥친다고 하여 사

한편 김정일도 1991년 5월 5일 담화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동구 사회주의진영의 대변혁을 사실로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세계사적 흐름에 순응하는 개혁적 인식차원에서 모색한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 체제의 고수라는 보수적 인식차원에서 선택하였다.

첫째, 김정일은 소련·동구 사회주의 및 중국의 민주화, 공산당 1당독재의 붕괴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이러한 현상들을 사회주의 전개과정의 일시적 '우여곡절'로 묘사하였다.[108]

둘째, 경제적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대내 사회주의 경제원칙 고수와 대외 제한적 경제교류 및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09]

회주의 원칙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 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108)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새 사회로써 계속적으로 원쑤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리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인만큼 전진도상에서 일시적인 우여곡절은 겪을 수 있읍니다."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1.5.5 담화)."

요컨대 북한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동구의 변혁과정에 대해 약 4년의 침묵기를 거친 후, 1989년 말 黨기관지를 통하여 비판적 태도를 천명하고, 1991년에 들어와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노선을 제시하였다.[110] 그리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의회민주주의·복수정당제 등에 기초한 정치적 민주화 개혁과 사상의 자유·언론의 자유 등에 기초한 사회적 민주화 개혁, 그리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적 민주화 개혁을 철저히 거부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다원주의와 자본주의적 개혁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주체사상적 유일체제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109) "제국주의자들이 경제협력 및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경제적 침투를 감행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백방으로 발전시켜 나가지만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책동은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위의 글.

110) 신일철, "북한의 '사회주의 좌절'론," p. 189.

다. 獨逸統一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은 통일되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일성과 북한은 동·서독의 통일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 언론은 동·서독 통일에 관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둘째, 김일성은 독일통일이 실현되자,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남북대화·교류에 따른 자유의 바람 유입과 흡수통일 방식의 전개에 대해 守勢的 劣等感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노동신문도 한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도통일·승공통일·흡수통일' 야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거듭 보여주었다.

> 최근 다른나라의 흡수통일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111]

> (남조선당국자들이)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민족내부 문제인 통일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남이 하는 방식으로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111)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1.1.1.

「평화적 이행」전략에 편승하여 우리에 대한 「개방유도」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흡수통합」, 「승공통일」을 이룩해 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112]

셋째, 김일성은 南北 共存, 즉 분단 제도화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91년 신년사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새로 내놓았고,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하에서 조국통일이 실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하나의 제도로 통일하는 체제통합은 다음 세대의 과제로 남길 것을 제안하였다.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113]

112) 「로동신문」, 1992.7.4.

113)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1.1.1.

라. 韓·蘇 修交 및 蘇聯의 解體

1990년 9월 소련은 한국과 수교에 합의하였고, 1991년 12월 31일에는 그 역사적 생명을 다하고 러시아에 국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114] 첫째, 북한은 한·소 수교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도부의 공식적 대응이 나오기 전에 먼저 노동신문을 통해 소련과 소련의 개편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非難을 전개하였다.[115] 한·소 수교는 북한의 대외

114)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문건으로서는 ① 김일성 "신년사" (1991.1.1), ② 김정일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1.5.5), ③ 김일성 "신년사" (1992.1.1), ④ 김정일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992.1.3)을 선택하였다.

115) "지난 9월 30일 소련과 남한 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되었는데 이것은 소련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이며 소련이 개편바람에 파국과 혼란에 빠져 쇠퇴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때에 산생된 현상이다… 지금의 소련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견지하던 그 전날의 소련이 아니고 그 어떠한 다른 성격의 국가로 변질된 것 만큼 그에 상응하게 새로운 벗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주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불과 몇년전에만 하여도 소련의 최고위당국가 자신이 소련의 남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었다. 1988년 12월에 발표된 조소 공동보도에서는 '소련측은 남한에 대한 자기의 원칙적 입장에서 변화

정책적 차원에 있어 '하나의 조선' 정책을 소련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될 뿐 아니라, 대내정책에 있어 '김일성 유일체제'에 대한 부정이 되기 때문이었다.

둘째, 북한은 한·소 수교 이후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주장하는 유일한 후견국인 中國과의 紐帶關係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고립감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는 정세인식적 측면을 보여 주었다. 김일성 주석과 연형묵 총리 등 당·정 고위급 인사가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였고, 노동신문 등의 보도매체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멸의 조중 친선관계'를 강조하였던 것이다.[116]

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고 '남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남한과 정치적 및 외교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오늘에 와서 소련이 이 엄연한 공약들을 다 휴지통에 집어 던지고 남한과 외교관계를 맺기로 하였으니 이것을 '배신'이라는 말 이외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소련은 사회주의제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이익과 신의를 23억달라에 팔아먹은 것이다."

"소련측이 평양에 와서 남한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또 한가지 불가피한 사정에 대하여 설명한데 의하면 지금 소련경제가 다 파괴되고 위기가 직면하였기 때문에 남한과 외교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던 소련이 '개편'정책 5년에 어떻게 했으면 나라를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해놓고 남한에 구걸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달라로 팔고 사는 외교관계," 「로동신문」, 1990.10.5.

116)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함께 싸

셋째, 북한은 1991년 8월 소련 쿠데타 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강화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와 옐친 등 소련 지도자들에 의해 사회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 북한과 중국은 내부 체제단속에 부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감대와 이에 기초한 양국간 동맹관계 지속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17]

넷째, 북한은 1986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침묵과 제한적 동의로 대응하였으나, 소련의 해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사회주의의 해체과정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북한 社會主義의 優越性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체제는 결코 해체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한 북한 지도부,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1992년 신년사와 1월 3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에서 쿠데타 이후 소련의 해

워나갈것이다," 「로동신문」, 1991.3.18; "형제적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 「로동신문」, 1991.5.3; "조중친선의 불패성에 대한 힘있는 시위," 「로동신문」, 1991.5.8;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조중친선," 「로동신문」, 1991.7.11.

117) "조중친선은 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10.25; "중국인민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 「로동신문」, 1991.10.1.

체를 명시하면서, 이것이 자본주의의 승리 및 사회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시적인 '사회주의의 좌절'임을 이 문건에서부터 주장하기 시작하였다.[118] 둘째, 김일성은 1992년까지도 여전히 낡은 帝國主義 음모론에 기초하여 정세를 인식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진영의 해체 원인이 사회주의체제 내부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119]

---

118)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고 있는 것은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큰 손실로 되지만 그것이 결코 사회주의의 위업의 정당성과 제국주의의 반동성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면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고, 자본주의의 복귀의 길로 나가면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게 된다는 것은 력사적 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며, 이 자체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반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2.1.1.
"최근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소련이 해체되어 자기 존재를 끝마쳤습니다. 이런 사태를 놓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마치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992.1.3)."

119)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사회주의를 완

한편 김정일은 사회주의 좌절의 원인에 대해 김일성이 제국주의의 음모 등 외인론을 강조하였던데 비하여, 內因論을 함께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즉 1992년에 들어와 소련의 해체 등 사회주의 좌절원인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외인론에서 내인론으로, 즉 소련공산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자체의 이론적 약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단 북한은 내인론도 주체사상의 교조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김정일은 혁명의 주체 강화 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된 것으로 보며, 특히 마르크스 유물사관의 경제주의적 한계성과 관료주의의 병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120]

둘째, 그는 소련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질적 차이를 알

전히 말살하고 식민주의 체제를 부활시켜 제국주의의 세계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2.1.1.

120)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한데 있습니다."
"관료주의가 자라나 사람들의 창발성을 억제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으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파기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992.1.3)."

지 못하였고, 나아가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된 것으로 보며, 특히 '개혁'과 '다원주의'를 허용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121]

셋째, 그는 사회주의 나라 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한 것으로 인식하며, 특히 소련 공산당의 독선과 동유럽 국가들의 사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122]

---

121)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와 경제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대신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데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수정주의 정책의 결과로 사회가 점점 변질되어 갔으며,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원주의」를 끌어들임으로써 사회주의의 변질과정은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다원주의」가 허용될수 없습니다.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 있어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량립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며, 사회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게 됩니다." 위의 글.

122) "큰 나라 당들이 대국주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당들 사이에는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를 받는 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나라 당들은 주체성이 없이 대국주의적 압력에 굴복하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큰 나라가 수정주의를 할 때, 같이 수정주의를 하고, 또

요컨대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좌절에 대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保守的 選擇을 지속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123]

한편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남조선혁명,' 즉 남한체제의 전복 의지보다 남한의 흡수통일론에 대한 체제적 위기감과 현실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면서 단일제도에 의한 흡수통일을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1992년 신년사에서는 '냉전시대의 낡은 관점으로 힘의 입장에 서서 조선문제를 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북한이 응했던 것인 바,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조선'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두개의 조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남이 「개혁」과 「개편」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련과 동구라파의 여러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쇄적으로 좌절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습니다." 위의 글.

123) "사회주의 원칙으로부터의 한걸음의 양보와 후퇴는 열걸음, 백걸음의 양보와 후퇴를 가져왔으며, 결국에는 로동계급의 당 자체가 파멸되지 않으면 안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되였습니다." 위의 글.

마. 韓·中 修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대응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한·중 수교에 대응하여 對美 關係改善의 필요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중 수교 다음 날인 1992년 8월 25일 북한은「로동신문」논설을 통하여 북·미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한정책 전환을 촉구하였다.[124] 그리고 연형묵 총리는 9월 8일 국가수립 44주년 기념행사 보고문을 통하여 북·미 관계개선을 거듭 촉구하였다.[125]

---

124) 리석윤,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로동신문」, 1992.8.25. "조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우리 민족의 분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이다. 지금의 조미관계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계속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이며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력사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정세의 변천에도 부합되지 않는 완전히 낡은 것이다. 북남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 발효된 조건에서 미국은 마땅히 이를 존중하고 그 리행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한다."

125) "만약 미국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성근한 입장에서 조미관계를 개

둘째, 그러나 김일성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해서도 이데올로기적 인식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1992년 9월 1일 「메디아 인도네시아」 신문사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김일성의 답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126]

셋째, 김정일은 自衛的 措置의 확보 차원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내통합과 핵무기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127]

선하는 길로 나온다면 우리도 과거를 돌아다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나갈 것이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미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로동신문」, 1992.9.9.

126) "…초대국들사이의 대결로 인한 랭전구조가 허물어졌지만 제국주의 낡은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변함없이 세계제패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것을 계기로 하여 현대제국주의는 계속 힘의 정책에 매달려 세계를 저들이 좌지우지하는 1극화의 세계로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1극화의 세계는 오히려 2극화의 세계보다 인민들의 자주화위업에 더 큰 장애와 위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지배주의를 추구하는 또다른 새로운 뿔럭들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동신문」, 1992.9.4.

127) 김정일은 수교 다음 날인 8월 25일 내부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은 믿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는 바, 자신을 믿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신의 원자탄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물질적 원자탄(제조중인 원자탄과 노동3호 미사일)에 의지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조·중관계에 있어 침묵은 금이다."라고

2. 主要 對內環境 變化에 대한 認識

가. 經濟·食糧難 深化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지속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28] 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은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1980年代 初부터 인식하기 시작하였다.[129] 그리고 북한 지도부는 1990년대 현재에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처하여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130] 1993년 12월 당 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信報」, 1993.5.7, 「世界日報」, 1993.5.8에서 재인용.

128) 「북한의 제3차 7개년 계획 종합평가」 (서울: 통일원, 1994).

129) "이게 사회주의 한 삼십년 해보니까 역시 인민들 먹이고 살고 하는 것은 서방세계로 뻗쳐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엄연히 서방 세계보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래 사람들이 지금 이거 의식문제가, 이거 아주 사상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 우리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동구라파 나라들이 지금 저 애먹죠." 최은희·신상옥, 「내래 김정일입네다」 (서울: 행림출판, 1994), p. 229.

130) "제 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은 대내외정세가 가장 복잡하고 첨예한 시기에 준엄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이전소련과 동구라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는 제3차 7개년 계획을 "원래 예견한 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인하였다.[131] 그리고 향후 2~3년간을 '사회주의 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였고,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내세워 이 기간 동안에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보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둘째, 김정일은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산업시설 중 60% 정도가 가동을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는 산업간

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세계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는 유례없이 격화되었다. 세계적인 정세파동으로 우리 혁명의 국제적 환경은 급변하였다. …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이어 일어난 엄중한 국제적 사변들과 복잡한 사태들은 우리혁명과 건설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커다란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다.…이것은 우리의 경제건설에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전반적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조절할 수 없게 하였으며 제3차 7개년계획을 원래 예견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강성산,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수행정형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조선중앙방송」, 1993.12.9.

131) 그러나 북한은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 원인이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한계 또는 주체경제의 정책적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제환경의 변화와 '원쑤들의 침략 책동' 등 외부적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컨대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세계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에 따른 경협과 무역의 부진 그리고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반사회주의적 공세'의 대응에 따른 경제력의 방위력 강화에로의 전환 등을 원인으로 상정하였다.

의 불균형과 공장·기업소 종사자들의 官僚主義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132]

셋째, 김정일은 북한 사회주의의 非效率性을 또는 사회주의 사회의 단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133] 개혁해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되는 사회주의제도 특성상 일을 안해도 되는 형식주의, 관료주의가 북한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과 사회주의의 모순을 알고 있었다.[134]

---

132) "기업 관리 측면에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수입해 가지고 거의 일식으로 들여온 게 우리나라에 한 1백50개 됩니다. 이거 1백50개 중소 공장에서 한 60%가 지금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느냐, 공업과 공업간에 균형을 맞춘다 해가지고 경공업을 너무 멸시하고 다른 기간 공업들만이 호상 균형을 맞춘다 해가지고 우선 원료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생산품에 대한 판매를 개척해 주지 않지요. 그 만든 기업소가 그 판로를 찾아야 되는데 다 국가에서 만들었으니 파는 것도 국가에서 하라는 게요. 하하하… 이럴러면 무슨 공장 지배인이 필요한가, 공장에서 노간부라 해가지고 돈이나 계산해 주는 사람이나 하나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지배인은 놀고 앉았고 기사는 원료가 안들어와 공장이 안돌아가 놀고 앉아 먹어. 제품이 나오는 것 없어도 노임은 노동자들에게 다 줘. 그러니까 그리 엄격히따지자면 국가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죠." 최은희·신상옥, 「내레 김정일입네다」, pp. 227~228.

133)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의 약점이란 말입니다." 위의 책, pp. 109~110.

넷째, 1990년대 김정일은 시장경제에 대한 計劃經濟의 優越性을 확신하고 있다.[135]

다섯째,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경제적 효율성 또는 합리성에 대한 주장에서 일보 후퇴하여 社會的 合理性 또는 道德性으로 연결시키면서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136] 예컨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9기 시정연설에서 김일성은 북한이 현재 '유족한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생활은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우월성을 강조하였다.[137] 김정일 또한 1992년 1월 담화에서

134) "그러니까 그저 일년에 한 작품 나와도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주고 작품 하나 썼댔자 그저 원고료 나오는데 그 원고료라는 건 어떻게 하면 그게 주업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게 부업으로 됐단 말입니다. 실지 써야 될거는 부업이 되었고 이거 안해도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국가에서 먹여살리고 돈은 돈대로 주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의욕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제도 좋다고 하지만은 내부 모순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위의 책, pp. 111~112.

135) "돈을 벌기위한 시장경제는 외국 독점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주는 예속경제는 인민대중의 이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발전 속도에서도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따를 수 없읍니다."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36) 金炳魯,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 69.

137)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아직 유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138]고 함으로써 1984년 "경제적 면에서 남조선을 압도하고 완전히 눌러 놓아야 한다"[139]는 평가에서 한 차원 내려섰다.

나. 改革·開放의 必要性

첫째,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은 體制發展을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상대적 비교의식을 갖게 하는 의식개혁과 기술발전을 위한 점진적 대외개방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나, 그 현실적 추진방법이 쉽지 않음을 또한 간파하고 있었다.[140]

(1990.5.24)."

138)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992.1.3)."

139)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1984.2.16)."

140) "그런데 우리 나라를 보면 우리 나라서는 그야말로 남북이 대결하고 있어, 또 세계에,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뭔가 하면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에만 국한시켜 그저 사회주의에만 나가고 있어 자본주의 국가에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실제상 일본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역교역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 민족간부 양성하기 위해서 기술도입하자고 실

둘째, 1980년대 초반 김정일은 開放의 전제조건으로 허무사상의 극복과 북한 기술의 향상을 지적함으로써 개방에 따른 사상와해와 반사회주의적 문화의 침투 그리고 북한 경제의 종속화를 경계하였으나,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141]

지 기술자도 보내자면 실제 그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적대관계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은 그 때 나 혼자 생각한 것은 내 의도는 에- 누구한테도 말은 안했고 내 그렇지 않아도 서방세계에서 서방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던 사람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것하고 합쳐가지고 서방에 침투해야 되겠다. 우리는 … 지금 딱 말하자면 울타리 안에서 자기 것만 보고 자기 것만 좋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모두 웃음) 이렇기 때문에 남의 것과 대비 안하고 대비해 볼 줄도 모르고…" 최은희 · 신상옥, 「내레 김정일입네다」, p. 96.

141) "중국이 나보고 그래요, 호요방이 …자기네들이 조금 개방해 놓으니까 뭐부터 배우는가, 개방 기술부터 배우는게 아니라 청년들이 수염기르고 머리 기르고 그저 외적인 것만 하니까 아직도 속에 들은 게 없어. 그렇게 나보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호요방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외국영화 자꾸 돌린다고하자, 에 테레비에다 대고 막 공개적으로 돌린다면 또 역시 허무사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에 그러하면 우리가 지금 양단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자기 민족적 자부심하고 그 다음에 애국투쟁 뭐 이런게 있어야 민족심, 민족심이 강한 것도 키워야 되겠는데 아 덮어놓고 외국 것 좋다고 숭배만 하니까, 그래 우리 기술이 그만큼 빨리 올라가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국 것을 개방해야 되겠는데 이것

셋째, 김정일은 특히 科學·技術分野에서 선진 과학기술의 과감한 수용을 위한 대외협력 및 점진적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1985년 8월 3일 발표한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 들이는 것은 自力更生의 原則에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여도 북한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체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1991년 8월 26일 발표한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 전위가 되자"라는 논문[142]과 1991년 10월 28일 발표한 "과학기술발전

도 또 우리가 지금 자체모순에 빠져있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위의 책, pp. 107~108.

142)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과는 높은 과학 기술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의 과학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의 선진 기술을 널리 받아 들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받아 들이는 것은 주체를 세우는 것과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체를 더 잘 세워 나가게 합니다. 청년들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 과학 기술 발전 추세를 잘 알아야 하며 세계 과학 기술 발전의 최신 성과를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 사회주의

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논문[143]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넷째, 김정일은 경제난의 해결 및 체제발전을 위해 對外貿易 擴大를 통한 개방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

건설에서 은을 내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술 신비주의를 비롯하여 나라의 과학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 요소를 반대하고 새로운 과학 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 전위가 되자," 「근로자」 (1991.9), pp. 22~23.

143) "… 적들과의 경제기술적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못한것처럼 생각하면서 자본주의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환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세계적범위에서 과학기술적 협조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 한 나라 안에서 과학연구사업을 하면서 본위주의울타리를 치는것은 시대착오입니다.…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됩니다. …다른 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는 철저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원칙에서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03~420.

석된다. 김정일이 1983년 6월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 북한은 1984년 1월「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여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년 9월에는「합영법」을 제정하여 대외무역을 적극화하였다. 김정일은 1986년에 대외무역과 경제적 자립이 상호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144] 오히려 나라의 경제의 자립성과 위력을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고 주장하였다.[145] 그는 심화되는 경제난을 대외무역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비례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도 넓혀가야 한다고 보고, 사회주의 나라는 물론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무역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146]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그는 '우호 및 평등과

144) "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첫자리에 놓고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 자립에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달된 나라도 무역을 하여 여러나라들과 유무상통하지 않고서는 잘살수 없습니다."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1986.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 380.

145) 김정일,「근로자」(1988.7), p. 18에서 재인용.

호혜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개방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147]

다섯째, 김정일은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청진항과 강원도 등 制限的인 地域開放을 구상하고 있었다. 한편 그는 전면적 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요새화된 군사시설의 대외적 노출을 거론하였다.[148]

---

146) 김정일,「근로자」(1989.2), p. 29에서 재인용.

147)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백방으로 발전시켜 나가지만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 책동은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48) "이번에 호요방이 우리 나라에 와서 나 보고 그래요. 당신네 관광업 왜 안하나. 관광업하면 돈 많이 번다. … 그래서 우리도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호요방한테도 그랬읍니다. 당신네는 큰 대륙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거 마음놓고 하지만 우리야 종심이 밭은데다가 국경이 해안연선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총총히 다 군사요새화 했는데 이걸 개방한다면 자기네 병력 축소한거나 같지 않은가. 다 와 보고 가면 다 개방하면 또 평양 개방하면 마감에는 국경에 남겨놓은 군대가 평양에 들어오고 자연히 무장해제 당하는거나 같다.… 우리 개방정책 이제 하겠는데 제한된 국부적인 몇 군데만 우리 하겠다. …청진하고 강원도 일대하겠다. 그럼 서해안은 안하는가 그래요. 그건 못하겠다. 서해안도 솔직히 말하면 개성서부터 이짝에 종심이란게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관광업 하겠다. 나 약속하고 왔읍니다." 최은희 · 신상옥,「내레 김정일입네다」, pp. 231~232.

여섯째, 김정일은 외화획득을 위한 '經濟特區' 이른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은 개방을 통한 經濟難 解決과 단속을 통한 體制 維持라는 상호모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1991년 12월에 오지인 함경북도 최북단에 특구를 만든 후, 1992년부터 「정무원결정」을 통해 대외무역사업을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개방 관련법들을 새로 본격적으로 제정하고, 대외무역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제한적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부족한 외화의 획득과 낙후된 기술의 습득을 위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적극적 투자 유치와 활성화를 강조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일곱째, 1990년대 김일성과 김정일은 개혁문제에 대해 상당히 완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教條的 社會主義의 고수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한은 구소련의 소포호즈(sovkhoz)나 중국의 인민공사 등의 농업집단화 정책의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서 郡단위 중심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농업생산성 저하의 원인을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혁명의식 부족

과 농업의 과학화 미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협동농장의 국영농장화 등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지속을 천명하고 있는 바,[149] 이는 경제제도 변경을 통해 체제수호적 조직 정비의 계기로 삼고 있을 뿐인 것이다.[150]

---

149) "우리는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편향 없이 잘해나가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을 전인민적 소유로 넘기는 사업은 군을 단위로 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업연합기업소로 전환되면 그 아래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과 국영농장들이 속하게 되며 여기에서 연합기업소와 그 아래기업소와 농장들은 다같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숙천군에서 군단위 독립채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온 것은 바로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이와 같은 전환과정을 예견한 것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 1994.2.24.)" 이 문건은 30년전 당중앙위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1964.2.25)"의 기본노선과 유사하나,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150) 이영선,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4), p. 811.

3. 主要 對南環境 變化에 대한 認識

첫째, 1980년대 初 김정일은 남한 공업의 실상을 조립품 공업으로 인식하고, 남북한 국력경쟁에 있어 北韓이 優位에 있는 것으로 확신하였다.[151] 그리고 김정일은 남북교류가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 합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152]

둘째, 1990년대 김정일은 南韓經濟가 북한경제에 비해 훨씬 발전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위적 조작'의 산물이라고 부정하였다.[153]

---

151) "국산화, 국산화 하는데 엔진 개발, 남조선 아이들, 남조선 사람들이라는 건 오토바이 하더래도 엔진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 뭐 그저 다 조립품이란 말입니다. 그래 자기네 국산화라는 그거 40%인데 조립해 가지고 선전을 어떡하나 국산화다. 우린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 공정 다 보여주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완성된 것까지 보여주고 그럼 이 기자들이라는 게 남조선 가서 그 남조선 공장하고 우리 공장 대비해 볼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나, 국방공업이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민다. 밀면서도 동시에 우리 뭘해야 되겠는가. 이제 인민생활을 올릴 때가 됐다." 최은희 · 신상옥, 「내레 김정일입네다」, p. 83.

152) "우리 에- 남북교류에서 첫번째가 뭔가 하면 우선 문화교류다, 문화합작이다. 그렇게 하는데 내 타산이, 내 타산이 그렇습니다." 위의 책, p. 94.

153) "제국주의자들이 일부 뒤떨어진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

셋째, 북한 지도부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비롯한 미국의 한국에서의 軍事活動에 대해 깊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54]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갖게 되면,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을 취해야 하는데, 원유와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력으로 이를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155]

넷째, 북한은 1992년 출범한 金永三 政府에 대하여 '두개

들고 그것을 사회주의 나라들과 대결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인 물질적 번영을 조작할 수 있으나 그러한 예속경제는 아무리 발전하여도 근로인민 대중에게는 진정한 복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54)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 타격하기 위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벌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켜온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더욱 큰규모로 강행하여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전국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반도에서 새전쟁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어가는 조건에서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국방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강성산,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수행정형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

155) 김학준,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의 장래,"「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p. 777.

의 얼굴을 가진 문민 파시스트' 또는 '문민 호전광,' '반민주·반민족·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과거와는 달리 민족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의 강도를 낮추었다. 그러나 북한은 '안기부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방북 구속인사 석방' 등이 문민정부의 시금석임을 주장하면서 비난의 강도를 다시 높이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북한은 남한의 통일정책을 吸收統一 政策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3단계 통일방안」이란 본질에 있어서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열을 고착시키기 위한 분렬방안이며, 「승공통일」을 노린 대결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56] 또한 "분열을 언제까지 지속시키며 껄렁껄렁 시간이나 보내면서 북에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어 흡수통일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156) "「승공통일」론의 복사판 「3단계 통일방안」," 「로동신문」, 1993. 9.12.

第 Ⅳ 章 北韓 指導部 情勢認識의 變化와 持續: 金日成과 金正日 比較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검토한 냉전기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과 Ⅲ장에서 검토한 전환기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을 토대로 북한 지도부 정세인식상의 변화와 지속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과 같은 유일체제에서는 최고지도부의 정세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정세인식과 김정일의 정세인식상의 상이성과 연속성을 함께 검토해 볼 것이다.

1. 變化

가. 對外觀

1) 國際政治觀

첫째, 國際秩序觀에 있어 특히 제국주의의 성격에 대하여 김정일은 김일성과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김정일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제국주의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기본 성격분석에서는 김일성과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국주의 성격이 1960년대 들어와 다국적기업의 출현

과 함께 변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출현으로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되었고, 이 결과 제국주의간에 결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157]

둘째, 外交理念에 있어 북한은 優先 順位를 변경하여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외교이념 순서를 '자주·친선·평화' 순으로 제시하였으나, 1988년 9월 공화국창건 40돌 기념 경축대회에서는 '자주·평화·친선' 순으로 강조하였다.[158] 북한이 '평화'를 '친선'보다 앞세운 것은 냉전질서의 붕괴, 소·동구권의 변화, 북한 경제난의 심화, 한·미 방위력의 증강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변경된 외교이념은 1992년 개정헌법 제17조에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으로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나오는 각종 논설 및 주장들을 분석해 보면, '자주·평화·친선'에 대한 개념정의에 있어 주체사상에 근거한 이데올로기적 偏向을 여전히 벗어

157)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73.

158)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 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한 보고, 1988.9.8)," 「조선중앙년감 1989」, p. 32 참조. 그러나 북한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9기 1차회의에서 대외정책 이념의 우선 순위를 처음 바꾼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內外通信」, 週刊版 第799號, 1992.6.11.

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9] 요컨대 북한 외교이념의 순서 변화는 한반도 공산화통일과 세계혁명 완성의 목표상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기보다는 냉전후기시대에 체제유지가 중요한 것임을 의미하는 우선 순위상의 전술적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外交路線에 있어 북한은 다소 實用主義的 立場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1986.12.30)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단결을 강조하였으나, 제9기 제1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적 원칙과 동지적 협조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동구권 및 소련의 변혁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듯이, 국제정세가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자국이익 중심으로 변화되는데 대한 북한 지도부의 대응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外交觀에 있어서도 북한은 냉전기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세계혁명 추구적 외교관에서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159) 황현, "자주·평화·친선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리념이며 활동원칙," 「국제생활」 (1989.1), p. 10; 허담, "자주·평화·친선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국제생활」 (1990.9), p. 3; 최승국, "우리 공화국의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 「로동신문」, 1991.1.23.

국가이익 추구적 외교관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도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 가운데 하나의 국가로 생존하기 위하여 현실적응적 외교정책 또는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동구 사회주의진영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 원인에 대해, 북한은 점차 內的 要因을 강조하고 있다.[160] 1990년 김일성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를 '미 제국주의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1992년 김정일은 외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적 요인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 들어와 김정일은 사회주의체제 붕괴가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우경 기회주의 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임을 경고하였다. 이를 보건대 북한은 이른바

160)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사실을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간주하고, 이를 "결코 우연한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단순히 외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를 "부분적이고 일시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그 이유를 자신의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적합하게 사회주의 사회를 발전시키기 못했고, 제국주의세력의 침투와 자체내의 수정주의세력의 등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평화적 이행'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해서는 다소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시에 북한 사회 내에 반체제 세력이 산발적으로 대두되고 있음과 이에 대해 적극 대비하고 있음도 유추해 볼 수 있다.

2) 對4國觀

첫째, 대미국관에 있어 북한은 냉전기 '제국주의'로부터 탈냉전기 '唯一 超強國'으로의 인식전환을 갖게 되었다. 사회주의진영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해체와 북한 안보의 기본 축이었던 「북방삼각관계」의 동요에 따라, 북한은 현실주의적 대미국관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대소련관에 있어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국'으로부터 '사회주의의 背信者'로 적대적인 인식전환을 갖게 되었다. 6년 여에 걸친 고르바초프 시대의 소련과 북한간의 관계는 '밀월'·'냉각'·'악화' 상태[161]로 점차 소원하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대중국관에 있어 북한은 1990년 9월 한·소 수교 이

161) 밀월기는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등장 때부터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 때까지, 냉각기는 1988년 9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악화기는 1990년 9월 30일 한·소 수교 이후 1993년 5월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후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혈맹'으로 인식하였고,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공식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非難을 자제하였으나 냉전기의 '혈맹'적 인식은 다소 퇴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3) 國際經濟觀

첫째, 帝國主義 性格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제2차대전 이후의 제국주의는 그 이전의 것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62] 김정일은 양차대전이 자본주의 열강들의 누적된 모순과 대립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현재 자본주의는 전쟁을 겪지 않고 몰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번창하

162) "자본주의 렬강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결사적으로 물고 뜯는 관계로부터 서로 결탁하여 협력하는 관계에로 넘어간 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렬강들 사이에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시기 그 모순은 부차적인 것으로 되고 오히려 결탁관계가 주되는 것으로 되였습니다. 제2차세계대전후 오늘에 이르는 40여년 동안에 170여차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으나 자본주의 렬강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은 한번도 없었으며, 도리여 군사쁠럭을 통하여 자본주의 렬강들의 군사적 결탁관계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제2차대전 이전의 제국주의는 상품시장과 세력권의 경쟁으로 전쟁이 일어났으나, 제2차대전 이후의 제국주의는 자본의 국제화가 추가됨에 따라서 자본주의 열강들간에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결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열강들간의 관계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서로 결탁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되어, 과거의 모순과 달리 자본주의의 모순은 결탁관계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1980년대에 일어난 일련의 세계정세 변화가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西方 資本主義의 발전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현실인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제2차대전 후 제국주의가 서로간의 시장쟁탈전 등 내적모순에 의해 붕괴하지 않고, 오히려 결속관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경제기술면에서도 성장했음을 인정하였다.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강화과정에서 사회주의진영이 여러 가지 과오를 범했으며, 전후 제국주의자들의 냉전정책에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방건설에 과중한 군사비가 투입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셋째, 북한은 對外貿易과 經濟協力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대외 경제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를 배격하며, 제한적 대외경

제개방을 조심스럽게 추진·확대하고 있다. 김정일은 북한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백방으로 발전시켜 나가지만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책동은 철저히 배격할"[163]것임을 천명하였다. 동시에 그는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데에 자기 힘을 믿지않고 자본주의 나라의 발전된 기술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164]

넷째, 김정일은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科學技術 交流 및 國際的 協力의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그는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을 언급한 바 있다.[165]

4) 安保觀

첫째, 북한 지도부는 1980년대 이전까지 지속해오던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식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166]

---

163)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64)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6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3.2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50.

둘째, 북한 지도부는 남한의 핵무기에 대해 다소 덜 위협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명하였다.[167]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그 현실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것임도 표명하였다.[168]

나. 對南觀

1) 南韓觀

첫째, 북한 지도부의 대남인식은 공격적 성향으로부터 점차 防禦的 性向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166) "오늘에 와서는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은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256~258.

167)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해도 미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쓰지 못합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아가 서로 맞붙어 씨름을 하며 돌아가겠는데 어떻게 핵무기를 쓰겠습니까. 적들이 핵무기를 쓰면 자기편도 죽습니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68.

168) "핵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고, 한두개의 핵무기로 수천개 수만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Washington Times*, April 15, 1992.

한국을 1950년대에는 무력공격의 통일대상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내부전복에 의한 통일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경쟁적 통일대상으로 인식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일체제'를 위협하는 흡수통일의 주체 또는 공존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169]

둘째, 북한은 南韓社會의 性格에 대하여 '식민지 반봉건사회'에서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의 전환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2) 統一觀

첫째, 南朝鮮革命에 대하여 북한 지도부는 1980년대 중반까지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점차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정책은 정부와 주민들간의 괴리상태를 전제로 한 '체제전복'적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의 확산을 통한 '체제약화'적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 발표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군비축소 문건[170]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입장이 냉전기

169) 이규열,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 「統一問題研究」, 第3卷 1號, pp. 143~145.

와 달리 상당히 守勢的 次元에서 共存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은 '먹고 먹히우는' 방식의 통일을 지양하고,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한 바탕에서 연방제식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적 미군철수'와 '단계적 축감' 등도 수용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은 냉전기에 '남조선 혁명론'이나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에 기초하여 공세적 통일을 추진하던 모습으로부터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군비축소 등 수세적 공존에 점차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북한의 聯邦制는 1960년대 초반에 처음 제기되었으나,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어 왔다. 북한의 연방제는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주도권을 전제로 한 통일지향적 대남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총체적 국력차원에서 남한의 우위가 확실해지며 국제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자 북한은 공존지향적 대남정책 차원에서 연방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

170)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 대책에 대하여," 1988.11;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990.5;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각종 문거;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993.4.7.

의에서 改正한 憲法에서 '전국적 범위'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개정헌법 1조를 통해 유일 정통성 주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11조에 로동당 영도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계급노선과 혁명노선을 강조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에 의한 '조국통일실현투쟁'을 천명하는 등 아직도 적화전략에 근본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바,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변화방향에 대해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김정일은 1980년대 초반에 남북관계를 '북과 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인 동시에 심각한 경제전'으로 규정하고, 體制競爭에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이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상대적 열세의 부진함을 보이자, 김정일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 아직 유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남 체제경쟁적 우월성을 사회심리적·도덕적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 지도부는 냉전기에 남한에 대한 자신감과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의지를 표출하였으나, 脫冷戰期에 들어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와 對南 共存지향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71]

2. 持續

가. 對外觀

1) 國際政治觀

첫째, 世界情勢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자본주의진영인 '세계제국주의'와 사회주의진영간의 對決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72] 김정일은 '현시기 혁명적 당들의 공동의 절박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이며, 주된 투쟁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임을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陣營論的 國際秩序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

171) "남조선 당국자들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속셈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들은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민족내부 문제인 통일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남이 하는 방식대로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편승하여 우리에 대한 개방유도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흡수통합, 승공통일을 이룩해 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여 90년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가자."「로동신문」, 1992.7.4.

172) 미국 등 서방 자본주의진영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은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 9.25)"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은 냉전시대의 '양대 진영론'적 세계관을 지속하고 있는 동시에, 전환기에 직면하여 체제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냉전기에 세계정세를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의 투쟁 가운데 혁명세력의 승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와 반혁명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혁명세력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73]

둘째, 國際關係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기본모순이 자본주의 열강들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열강과 사회주의진영과의 관계 및 자본주의 열강과 신생제국 발전도상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자본주의 열강과 신생 발전도상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식민주의는 신생제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와 약탈을 감행한다는 것이다.[174] 김정일은 종속론적 패러다임에

173) "오늘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는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놓고 마치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 듯이 떠들어 대면서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2.7.20 논설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

기초하여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새로운 國際秩序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각 국가의 자주성이 보장되는 '자주화된 세계'를 주장함으로써, 自主性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주화된 세계를 국가간에 "지배와 예속, 간섭과 압력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로서 인식하였다.[175] 그리고 그는 북한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간섭과 전횡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여 나갈 것"[176]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김정일은 새로운 국제질서가 북한체제에 위협적이므로 체제보존의 차원에서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社會主義의 失敗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사회주의 자체의 실패와 붕괴가 아니라 '그 관리 운영면에서' 좌우

174) "자본주의적 착취로 말미암아 지난 시기에는 매개 자본주의 나라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지배하였다면, 이제와서는 세계가 부유한 자본주의 나라들과 가난한 발전도상 나라들로 갈라져 세계적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

175)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1992.10.1)."

176)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4.

경적 오류를 범했음을 표명하고 있다. 즉 소극적 차원에서 사회주의의 실패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177] 또한 이는 '사회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機會主義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78]

다섯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이념경쟁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社會主義의 優越性 및 종국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본주의 사회를 '부유하고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179]

177) "물론 지난 시기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리용하였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새 사회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좌우경적인 편향도 범하였습니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과정에도 편향이 나타났지만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과 건설을 어떻게 해나갈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심중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력사적 조건이 서로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 호상간의 관계를 처리하는데서도 일련의 엄중한 편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178)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79)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부가 많이 생산되여도 물질생활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며 부유한자들은 아무런 가치도 보람도 없는 사치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막대한 재부를 탕진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빈궁선 이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자와 파산, 알콜중독자와 마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평등·복지·건전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80] 이와 같은 김정일의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181]에 기초할 때, 북한은 향후 개혁이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약중독자가 늘어나고 살인, 강도와 같은 사회악이 늘어나 사람들이 날로 더욱 불안과 절망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한마디로 말하여 썩고 병든 사회이며 전도가 없고 멸망에 가까와가는 사회입니다."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10.1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224~227.

180)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걱정을 모르며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두다 고르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으로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마음껏 배우고 다같이 발전하며 무병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도 실업자도 없고 알콜중독자나 마약중독자도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에 불안과 고통을 주는 그 어떤 사회악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서로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의 책, pp. 227~228.

181)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2) 對4國觀

첫째, 美國의 經濟危機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이데올로기적 인식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차지하여 온 지배적 지위'를 점차 상실하고 곤경에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팽창된 大군수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를 군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예산의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대외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마침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로부터 최대의 채무국가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182] 북한은 미국 경제의 침체를 '경제의 군사화' 요인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美國의 對北韓政策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미국이 '아세아·태평양 전략'으로 북한을 고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83]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정책을 '강권과 압력'

182)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76.

183)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반동들과 세계제국주의의 세력을 규합하여 우리나라를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핵군사기지로 틀어쥐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 위업과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며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또는 '고립압살' 정책으로 인식하였다.[184]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1988년 이후 북한의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對日本觀에 있어 북한은 군국주의 평가적 인식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해외파병 문제, 핵무장화 및 플루토늄 문제, 과거 청산 및 종군위안부 문제, 신사참배 문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서의 일본의 역할 및 유엔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문제 등 일본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북한은 비난을 가하고 있다.[185]

넷째, 대중·러관에 있어 북한은 러시아의 체제변화와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186]

1988.5.15)."

184) 윤우철, "배신자들이 몰아온 대결과 전쟁국면 (월간 국제정세 개관)," 「로동신문」, 1994.3.31.

185) 「로동신문」 논설 및 논평, 1993.1.22; 1.31; 2.3; 3.24; 4.19; 8.4; 8.19; 8.21; 9.4; 9.19; 10.4; 10.23; 11.4; 11.14; 11.19; 11.25; 12.8; 12.12; 12.30 등.

186) "우리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계속되는 압력과 봉쇄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승승장구해나가고 있으며 회색바람, 황색바람이 어지럽게 불어오는 속에서도 사회주의 보루로서의 불패성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홍성남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1994.9.9)," 「북한논조 1994.10」 (서울: 통일원, 1994), p. 219.

3) 國際經濟觀

첫째, 資本主義의 將來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자본주의의 파국적 결말이라는 레닌의 명제를 지속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은 해외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하며 이 시장개척은 한계에 부딪히며 따라서 생산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실업자 증대와 통화팽창에 따라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김정일은 인식하고 있다.[187]

둘째, 帝國主義의 弊害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더욱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국주의의 폐해에 대하여 '약탈'·'이중삼중의 착취'·'민족적 인종적 억압'·'계급적 모순 첨예화' 등을 지적하였으나, 김정일은 제국주의의 '반인민성'·'부패성'·'비도덕성'에 대해 훨씬 노골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다.[188]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가 이러한 도덕

187) "앞으로 제국주의 렬강들 사이의 모순과 대립도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 렬강들이 저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결탁하고 있지만 시장이 더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치부의 길이 막혀짐에 따라 그들 사이에 리해관계가 대립되고 모순이 격화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적어지면 승냥이들끼리 서로 물고 뜯기 마련입니다."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177.

188) "자본가들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

적 타락성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각성한'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189]

셋째, 市場經濟制度 擴散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경제제도는 생산수단의 사유화 및 개인주의 그리고 국제적 교류에 기초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의 현 정치·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190] 김정일은 '제국주의자와 자본가들'이 근로대중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 결과 근로 대중이 경제적으로 착취되고, 사상적으로 타락하며 창조적 능력이 기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사회

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냄으로써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되여가고 있다." 위의 책, pp. 177~180.

189) "현대 제국주의가 림종에 가까와 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력사적 필연성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오직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멸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책, pp. 180~181.

190) 이석호, "남북한 국가관·대외관의 갈등양상,"「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213~215.

주의 사회의 본성에 배치되며 그런 식으로 사회주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넷째, 對外開放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자립적 민족경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종래의 '자력갱생' 노선[191]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서방 자본주의 나라들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를 걸면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 굴종하고 있는 것"은 '반동적인 부르조아 관점'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늘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를 걸면서 자본주의 복귀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착취계급의 선의나 계급협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혁명을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외개방이 결코 자본주의 도입의 창구가 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건설해 놓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잠재력은 매우크며 그것은 전체 인민의 건전하고 안정된 물질생활를 보장하는 귀중한 밑천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

191) "자력갱생하는 것은 남의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이라도 선진적인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12.28),"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272.

라서 그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또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에 기초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전력할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192]

4) 國際安保觀

첫째, 平和問題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동서 평화공존적 인식보다 전쟁불가피론적 인식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일은 "현대제국주의가 임종에 가까와 왔다"고 보면서도,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인민 대중의 투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國防問題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1984년 김정일은 "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도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국방·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지지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1990년 9월 한·소 수교 이후 김정일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193] 나아가 1992년 8월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자 김정일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으

192)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3)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 보도, 「朝鮮日報」, 1994.6.16에서 재인용.

로 판단된다.[194]

나. 對南觀

1) 南韓觀

첫째, 南韓의 國際的 位相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시위하려는 미제의 경제적, 정치적 기지'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은 남한이 북한보다 낙후된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북한보다 번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95]

둘째, 南韓의 情勢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1988년을 전후한 남한의 정치적 격동을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국통

194) 홍콩의 「信報」 (1993.5.7), 「世界日報」, 1993.5.8에서 재인용.

195)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가장 큰 동맹자인 일본과 린접해 있고 아시아 대륙의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 남조선의 전략적 의의를 중시하면서 남조선을 핵군사기지로 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일본제국주의를 비롯한 세계반동들을 그러모아 남조선을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경제적, 정치적 기지로 만들고 조선반도에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시위해 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한편 김정일은 북한을 '사회주의 동방초소'로 규정하였다.

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196] 그리고 남한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이 모두 북한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197]

셋째, 南韓의 性格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미제의 식민지, 핵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냉전적인 대결 인식을 지속하고 있다.[198]

넷째, 金永三 政府와 관련하여 북한은 '역대 군부독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99]

---

196) "청년학도들을 비롯한 광범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깨닫고 북반부 인민들과 합쳐 조국을 통일하려는 기운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5.15)."

197) "청년들은 높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234.

198) "…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핵군사기지로 틀어쥐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 위업과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며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5.15)."

199) "문민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로동신문」, 1994.8.21; "인

2) 統一觀

첫째, 統一方案 및 原則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고려연방제」[200]와 1990년대에 통일을 이룩하자는 구호와 「조국통일 3대원칙」 및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자는 문구 등 김일성의 통일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201]

둘째,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한 '선 폭력혁명, 후 공산화통일'의 統一觀은 김정일 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로동당 규약을 보면 " …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

권을 유린하는 가짜 문민정치," 「로동신문」, 1994.9.21; "문민반역도당을 두고 인민들의 염원은 실현될 수 없다," 「로동신문」, 1994.9.25.

200)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89.10.2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245~246.

201) 김영남, "(김일성) 추도사," 「조선중앙방송」, 1994.7.20; 계응태, "보고문 (김정일 노작발표 20주년 기념보고대회)," 「조선중앙방송」, 1994.8.27; 홍성남, "보고문 (국가수립 46주년 기념대회)," 「조선중앙방송」 1994.9.9;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련방제방식으로 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온 삼천리강토에 활짝 꽃피울 것입니다." 김기남, "추모사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회)," 「조선중앙방송」 1994.10.16 등.

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립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당규약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1961.9.18, 1970.11, 1980.11) 되었으나, 최종목적(공산주의사회 건설)은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3. 小結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질서에 대한 종속론적 패러다임과 사회주의의 우월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必亡論에 대한 확신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쟁불가피론적 인식과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남인식에 있어서는 남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인식과 남한 문민정부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지속하고 있으며, 「조국통일 3대원칙」 및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 기존의 통일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체제유지 및 발전' 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탈냉전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외교이념의 우선 순위와 외교노선을 바꾸었는 바, 혁명지향적 정세인식으로부터 국가이익지향적 정세인식으로

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변 4국 및 국제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적 인식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남인식에 있어서도 수세적 입장에 기초한 공존지향적 인식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북한 지도부는 대외정세 및 대남관계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냉전적 인식틀은 지속하고 있으나,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 상황 가운데 '체제유지 및 발전'이라는 최소 국가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추수적인' 탈냉전적 인식태도를 동시에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세인식에 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과 같은 대내 체제개혁 문제에 대하여서는 김일성보다 김정일이 훨씬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김정일은 단지 체제수호적인 개혁, 즉 세도정치 철폐, 관료주의 타파, 부정부패 근절 등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와의 협력과 같은 대외 경제개방문제에 대하여서는 김일성보다 김정일이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양자 모두 보수적·냉전적·경쟁적 인식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요약과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脫冷戰期 북한 지도부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情勢認識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관에 있어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인식을

명목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천명하되, 실제적으로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적 국제질서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북한만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보루로 남아 자본주의진영과의 대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양대 진영론을 체제유지를 위한 논리로 작동시켜 왔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반제·자주의 대외관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대남관에 있어서도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인식을 명목적으로 지속하되, 실제적으로는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냉전기 남한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우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탈냉전기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직면하여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시에 대내 체제결속을 위해 상대적 정통성 우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탈냉전기 북한은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즉 김정일 정권하에서는 명목상의 혁명 추구와 실제상의 실리 추구의 二重的인 認識(대외: 이데올로기적 인식과 현실적응적 인식, 대남: 공존지향적 인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第 Ⅴ 章 脫冷戰期 北韓의 政策 展望

북한 지도부의 인식만 놓고 볼 때, 대담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 강화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정책 및 대남정책은 개방과 공존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탈냉전기적 상황 가운데 북한 정권이 직면하는 과제의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김정일 정권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간략하게 검토해 본 후, Ⅱ·Ⅲ·Ⅳ장에서 검토한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을 기초로 하여, 향후 북한이 추진할 정책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1. 金正日 政權의 當面課題

가. 政權의 鞏固化와 經濟難 解決

첫째, 김정일 승계체제는 지난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유지 장애요인들의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 사상통제 강화와 제한적 대외개방정책 그리고 임금인상[202]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증가, 성문란 풍조 심화,[203] 부패의 만연,[204] 반사회주의 풍조의 확산,[205] 비조직적 반체제 활동 등 사회일탈행위가 증대되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난 또한 당국의 다각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였고, 1992년부터는 대외개방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본격적으

---

202) 「로동신문」, 1992.2.14. 북한은 1992년 3월 1일자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평균 43.4% 정도 인상하였으며, 연금은 평균 50.7%, 학생들의 장학금은 33% 인상하였다. 농산물의 정부수매가격도 벼 26.2%, 강냉이 44.8% 등 전반적인 임금인상조치를 단행하였다.

203) 청년 및 대학생들 사이에 불륜사건 빈발로 퇴학사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청진·남포 등 주요 도시의 역전 및 극장 주변에 매춘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당국 주도로 평양의 고려호텔 등 호텔 종사자들의 외화획득을 위한 매춘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4) 북한에도 금전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국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뇌물을 제공받고 발급해 주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 예컨대 운전면허증은 10달러 정도, 당원증은 50달러 정도, 여행증명서는 200~300원 정도 주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5) 순수 오락용인 주패·마작이 도박화되고 있으며, 최근 재중교포 및 화교들을 통해 전파된 '고스톱'이 성행하고 있으며, 벌목공, 화교, 암거래 장사꾼들 사이에 이자놀이·고리대금업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로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3년 12월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향후 3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고,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를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채택함으로써 경제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206] 그러나 식량난의 지속·원유도입 감소에 따른 에너지난의 지속·원료난에 따른 생필품 부족의 만연·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외채 및 무역의 악화상태 지속 등으로 인하여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207]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정권의 공고화를 위하여 김정일 측근세력으로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김정일에 대한 象徵造作과 대주민 思想統制를 강화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난을 해결하여 주민생활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核問題 解決 및 對外關係 改善

첫째, 북한은 미국과 3단계회담을 통하여 현재 및 미래의 핵개발 동결과 궁극적인 핵주권 포기를 전제로 경수로 및 대

206) 許文寧,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서울: 民族統一硏究院, 1993).

207) 「북한의 제3차 7개년 계획 종합평가」 (서울: 통일원, 1994).

체에너지 지원과 외교대표부(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를 도출하였으나,[208] 기타 주변 3국과 한국으로부터 과거의 핵개발에 대한 투명성 보장 등 핵개발 포기를 향한 가시적 조치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압력받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뿐만 아니라 군사적 전용을 목적으로 한 플루토늄의 추출여부도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구소련 공화국들의 핵관리뿐만 아니라 자국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여, 북한이 NPT를 준수할 경우 최신 경수로 3대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등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다. 북한의 유일동맹국인 중국의 경우도, 김일성 사망 발표 직후 김정일 승계체제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천명하였으나, 동시에 대화·협상에 의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안정유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실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북한의 핵무기개발 봉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핵물질 전용여부 등 核透明性을 규명하고, 이를 위해서 남북상호사찰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비록 3

208) 「中央日報」, 1994.10.22; 「로동신문」, 1994.8.14.

단계 2차회담에서 「북·미 기본합의서」를 도출했어도, 과거 핵개발 문제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북한의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 노선은 약화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소련의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북한 경제난 심화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북방삼각관계의 와해와 조정 그리고 한·러/한·중 수교는 북한의 안보 위기감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평양선언'(1992.4.8)을 발표하면서, 사회주의 정당간의 연대성 강화로 대응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진영의 전반적 약화로 말미암아 그 성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脫冷戰的 狀況 가운데 대외적 고립과 경제난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대미관계 개선을 기초로 대주변 4국 및 대서방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國力의 相對的 劣勢 克服과 南北關係 再定立

첫째, 남한의 정치·경제·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의 지속적 발전과 이에 따른 남북한간의 국력격차 증대는 북한으로 하여금 더이상 체제경쟁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남한에서의 문민정부 출범은 그동안 북한이 정통성이 취

약한 남한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전개하였던 종전의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남한은 통일정책으로서 북한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봉쇄정책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단계적·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참여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국제적 대북압력 조치가 논의되는 시점에,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을 초청하여 제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도출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 남북관계개선에 다소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후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되었으나, 이는 김일성이 약속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므로 김정일 정권은 남북대화를 무한정 회피하거나, 남북정상회담을 무한정 연기하면서 공세적 대남적화전략만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요컨대 김정일 정권은 북한 국력의 상대적 열세화와 남한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통일전선전술의 한계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압력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金正日 政權의 政策 展望

가. 基本方向: 對內 強硬·對外 宥和 政策

북한이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은 급진적 개혁·개방,[209] 소극적 개혁·적극적 개방('개혁없는 개방'), 폐쇄적 고립노선[210]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북한 당국은 극단적 정책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이 가운데 消極的 改革·積極的 開放政策을 채택하여 당면한 경제난과 외교난을 풀어감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211]

한편 김정일의 정세인식에 기초하여 향후 김정일 정권의

209)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은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 및 폐쇄체제와 기본적으로 모순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개혁세력의 주축인 군부의 합리적 신진세력과 기술관료의 연합집단에 의해 정권대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 결과 개발독재형의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결국 북한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10) 폐쇄적 고립노선은 단기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활고에 따른 주민 폭동 및 군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11) 그러나, 북한의 현 경제난이 정책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구조적 변화 없는 개혁정책'으로서는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책 방향을 예상해보면, 대내정책에 있어서는 개혁을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노선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교육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미국 및 주변 국가들의 대북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핵모호성 정책(nuclear ambiguity policy)을 지속할 것이며, 경제난 타결을 위해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조국통일 3원칙 및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되,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국제적 압력 및 대남 체제경쟁의 부진을 극복하려 할 것이며, 경제난 타결과 대남교란을 위해 민간차원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기별로 김정일 정권의 정책을 전망해보면, 초기에는 정권의 공고화를 위하여 대내통제 및 대외긴장완화 정책을 추구할 것이나, 점차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추진해온 '주체적 대외개방,' 즉 사상통제에 기초한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實用主義的 政策路線으로의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김정일 정권의 정책방향을 부문별로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 部門別 展望

1) 對內政策

첫째, 북한은 주체사상과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함으로써 통제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대내결속을 위해 그동안 사용해온 주체사상에 근거한 각종 논리('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와 함께 1993년부터 개발한 역사적 정통성 논리인 '민족문화유산' 논리(「동명왕릉」 개수 및 「단군왕릉」 발굴 주장 등)를 통해 체제통합을 더욱 추진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3대제일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부족한 카리스마를 경제난 극복이라는 업적으로 보완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정통성 확보를 위해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업 및 경공업 발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업에서 '협동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 확대와 '이중 독립채산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다. 동시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확대함으로써 부분적 경제개방 정책을 강화하되, 주체의 자립경제를 원칙으로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 각 분야에서 점차 세대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수

의 전문기술관료가 중견간부로 충원된 점도 북한의 정책변화를 초래할 것인 바, 혁명 2세대 전문기술관료들은 아직 이념지향적 성격이 강하지만 점진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할 것이다.

요컨대 김정일 정권은 대내적으로 主體思想의 '김정일주의'화와 歷史的 正統性의 강조를 통하여 체제통합을 강화하고, 3대제일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난을 타결하여 김정일 유일지도체제를 지속하고자 할 것이다.

2) 對外政策

가) 基本方向: 關係改善과 '主體型 對外開放'[212] 및 '誘引外交'[213]推進

첫째, 김정일 정권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서」에 따른 미국의 후속조치 실시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이에 대

212)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통제강화를 통해 체제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제한적 경제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필자가 '주체형 대외개방'으로 명명하였다.

213) 허문영, "전환기의 북한외교정책," 「統一研究論叢」, 第2卷 第2號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27~35.

응하여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투명성을 규명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금년 4월 북한이 당중앙위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생필품난, 외화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향후 3년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정권에 대해 정치·경제적 보장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핵무기개발을 전면 포기하기보다 核開發 凍結이라는 명분으로 일시 중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국가들의 대북한 정책전개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 정권은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정책전개와 더불어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혁명외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실리외교」에 비중을 더 둘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무역제일주의와「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정책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해외자본 및 기술도입을 확대하는 등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정책이 성공할 경우, 북한은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대담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대주변 4국관계와 관련하여 김정일 정권은 고위급 인사들의 초청 및 방문외교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바, 중국과 소련 중심의 '진영외교'를 완화하고 대주변 4국 '유인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김정일 정권은 대내정책 분야의 변화에 비해 대외정책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방향에서 주체형 대외개방과 대외관계개선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細部的 政策 展望

첫째, '北韓 核' 問題와 관련하여 김정일 정권은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북·미 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포괄적 관계개선의 틀을 전략적 차원에서 이행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및 주변국가들의 대응을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전술적 차원에서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 해결을 위해 타협과 강경노선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214] 그리고 「북·미 기본합의서」에는 합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이 계속하여 핵모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여지[215]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

214)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1992년 1월 22일 미국과 고위급 접촉을 시작한 이래, NPT탈퇴(1993.3.12), 북미고위급 1,2단계 회담(1993.6~7), IAEA탈퇴(1994.6.13), 북미 3단계회담(1994.8~10)으로 이어지는 강경과 타협을 반복하였다.

215) 북한의 과거핵 규명의 시한 지연, IAEA 특별사찰 시기의 불명확성, 경수로 제공시까지 폐연료봉의 북한내 보관, 흑연감

둘째, 經濟開放 政策과 관련하여 김정일 정권은 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하여「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외자유치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3년 3월 나진·선봉 특구를 125평방킬로미터 추가로 편입하여 총 746평방킬로미터로 확대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기초하여 서방국가로부터의 자본·기술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목표로 내걸고 있는 경공업제일주의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통해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對美國 政策에 있어 김정일 정권은 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적 압력을 해소하는데 있어 '유일초강국'인 미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자유화 바람에 따른 북한체제의 동요가능성을 십분 고려하여, 점진적 대응차원에서 1단계 연락사무소, 2단계 대사관 개설의 속도를 조절코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對中國 政策에 있어 김정일 정권은 혈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정권 및 체제의 안정을 위해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교부 부부장인 송호경을 방

속로의 폐기시한 지연 등.

중(1994.8.30~9.3)케 하여 중국 외교부 부부장 당가선 등과 회담케 하였고, 부주석인 이종옥을 방중(9.27~10.4)케 하여 중국 건국기념일 행사 참가와 중국 강택민 주석 및 이붕 총리와 회담케 하였다. 그리고 북한·중국 수교 45주년을 맞이하여서는 강택민-김정일, 이붕-강성산 간의 축전교환을 가졌는 바,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대중 동맹관계 지속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다섯째, 對러시아 政策에 있어 김정일 정권은 다시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 편제가 러시아 군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구조가 상당히 러시아와 의존적 관계에 있는 바, 북한으로서는 대한반도 균형외교정책을 추진하려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군사 및 경제적으로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파노프 외무차관이 옐친 대통령의 특사로서 방북(9.20~24)하여 북·러 선린관계 회복 문제와 경수로 제공 및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러시아 자유민주당 대표단(단장: 지리노프스키 당수)이 방북(10.2~6)하여 노동당 대표단과의 회담에 이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 및 이종옥·김병식 부주석 등 고위 黨·政 인물들과 면담을 가졌는 바, 러시아의 대북접근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216]

216) 러시아의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이념을 배제한 새로운 관계정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10월 말 구소련 붕괴 이후 러·북

여섯째, 그러나 對日本 政策에 있어 김정일 정권은 당분간 냉담한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1994년 6월 29일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내각이 출범하였고,[217] 8월 북경에서 북·일 비밀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일본의 대북 유화제의가 거듭 천명되고[218] 있으나, 북한은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하는 빨치산 체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제통합을 위해 대일 적대적 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북한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생'과 '핵무장화 책동'이라는 기존의 경계적 비난 논리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또는 일본의 '무라야마' 연립정권이 친한일변도 정책을 다소 수정하여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추진하고 대북 수교협상에서 배상금 및

한간 무역 경제·과학 기술 공동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임을 밝혔다. 「中央日報」, 1994.10.13.

217) 일본은 친북성향의 사회당을 포함한 연립정권이 등장함에 따라 이전의 자민당 정권보다 대북수교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는 바, 1994년 8월 10일 야마시타 신타로 신임 주한일본대사는 북한의 핵의혹해소가 양국수교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표명하였다. 「東亞日報」, 1994.8.11.

218) 10월 21일 고노 요헤이 외상은 조건없이 대북수교협상 재개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世界日報」, 1994.10.21), 10월 24일 사이토 구니히코 외무차관은 남북대화보다 북·일 수교협상이 선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문화일보」, 1994.10.24.

배상방식에 있어 대폭적으로 양보할 경우 또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흡수통일 기조 위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다시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3) 對南政策

가) 基本方向: 共存과 '政·經分離' 政策 推進

첫째, 북한은 정치적 차원에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위해 대남 적대시정책을 공개적으로 추구할 것이나,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난의 해결을 위해 대남 유화정책을 은밀하게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해 다소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공세적 묵살' 정책 또는 '적대적 공존' 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냉전적 인식을 지속하고 있는 바, 한국의 평화적 합의통일 정책을 공세적 흡수통일 정책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은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승계에 따른 내부체제 정비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수세적 적응' 차원에서 '경쟁적 공존'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김정일 정권이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 상황 가운데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보다는 '정권의 공고화'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주변 4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다소 지연될 것이나, 북한은 이를 김정일의 통치력 선전에 활용함으로써 정권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재로 판단할 것인 바, 1995년에는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김정일 정권은 대남관계에 있어 3대혁명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때까지 '공존' 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공세적 묵살' 또는 '적대적 공존' 정책과 '정·경 분리' 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수세적 적응' 정책과 '경쟁적 공존' 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細部的 政策 展望

첫째, 南北關係와 관련하여 북한은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체제수호적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남북공존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몰락한 동구 사회주의진영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 대북한 국제적 압력이 대두될 때, 북

한은 이를 '평화적 이행' 전략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족대단결' 원칙을 다시 강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민족주의를 내세워 대내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 한국과의 제한적인 공존을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안정화를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統一政策과 관련하여 북한은 김일성 시대의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계응태 공안담당 비서의 보고(8.27), 홍성남 부총리의 보고(9.9) 그리고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회에서의 김기남 선전선동담당 비서의 추모사(10.16)를 통하여 북한은 김일성이 제안한 '조국통일 3대원칙'(1972.7)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4)에 입각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1990년대에 기필코 이룩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南北對話 政策과 관련하여 북한은 당분간 냉담한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미 3단계 2차회담 합의문에서 남북대화의 진전이 전제조건으로 명시되었으나, 아직 김정일의 당총비서 및 국가주석직 취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바, 북한은 내부체제정비에 역량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일성 사망후 권력이양의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 신정권의 붕괴가능성 및 '흡수통일'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북한은 정권안보 위협적 인식을 표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과거 한국의 내부정세가 혼란할 때, 이른바 '남조선혁명역량'이 강화되었을 때, 남북대화에 있어 냉담한 태도를 취해온 양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넷째, 非當局間對話 政策과 관련하여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통일전선전술은 주체사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은 김일성 정권의 연장에 불과한 김정일 정권에서도 체제이데올로기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은 한국에서 김일성 장례와 관련하여 조문사절 파견문제로 국론분열이 일어나자, 「조평통」 명의로 이에 대한 환영을 즉각 발표함으로써 선전·선동에 활용하였던 것이다.

다섯째, 海外同胞 政策과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에 '제2의 조총련'과 같은 친북한단체 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대외신용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난 해결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빌려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최근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북한출신의 재미교포들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북한에 방문케하여 친척들을 만나게 한 후, 그들의 심정에 호소하는 한편 그들의 친척들을 볼모로 삼아 '공화국발전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하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여섯째, 對南 經濟政策과 관련하여 북한은 당국간 대화와 달리 민간 경제 교류·협력에 대하여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 해결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에 19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1993년에는 넓이를 확대하였으며, 1992년 이후 관련법규를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해외자본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기업의 유치에 적극 나설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對南 軍事政策과 관련하여 북한은 비록 핵무기개발정책을 중단하더라도 질 위주의 군사력 강화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군축'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量 위주의 군사력 강화에서 質 위주의 군사력 강화로 군사정책 기조를 전환시켜 온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체제는 항일 빨치산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바, 내부 결속과 김정일의 군권강화 그리고 군부의 경제적 불만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사력 증강정책과 대남강경 군사정책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비록 국제적 압력에 따라 핵무기개발을 잠시 중단할 것이나, 화생방 무기를 비롯한 고성능의 장거리 미사일개발 등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의 타결과

한국의 국론 분열 조장을 위하여 1990년 5월에 발표한「군축제안」을 새로이 포장하여 다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북한은 한국에서의 '지존파' 사건·공무원 세금횡령 사건·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과 같은 비리 및 '주사파' 파동과 '북핵' 처리문제를 둘러싼 국민정서의 분열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체제 정비 및 결속을 위하여 당분간 대남 냉담태도를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경제난의 해결을 위하여 민간 경제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1995년 6월 한국에서 '지자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와 같은 二重的 對南政策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第 Ⅵ 章 結 論

1. 要約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하나는 북한 지도부의 대외·대남 정세인식상의 변화와 지속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에 기초하여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통일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冷戰期 北韓 指導部는 대외정세인식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비중을 두되, 정권의 자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219] 즉 북한 지도부는 국제질서에 대하여 양대 진영론적 입장과 '혁명·해방'의 시각에서 인식하되, '반제·자주'를 정세인식의 시금석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남정세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전조선혁명론'과 '하나의 조선론'의 틀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219) 북한 지도부는 1960년대 초반 소련의 동서 평화공존 노선과 탈스탈린화 정책이 김일성 정권의 자주성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되자 소련을 '현대수정주의'로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1960년대 후반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대북한비난 정책이 김일성 정권의 자주성에 흠집을 내자 중국을 '좌경기회주의'로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이데올로기에 철저히 기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북한 지도부는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하여 '미제로부터의 민족해방'과 '괴뢰·파쇼정권에 대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시각에서 인식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전환기에 들어와 북한 지도부는 '3대혁명역량'의 약화 추세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 지도부의 정세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련의 개혁·개방화정책, 동구 사회주의진영의 붕괴, 독일통일, 한·소 수교 및 소련의 해체 그리고 한·중 수교 등 일련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지도부는 격리와 선별적 동일시 그리고 동맹강화와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에의 의지를 강력히 표출함으로써 수구적인 대외정세인식을 지속하였다. 또한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방외교 그리고 문민정부의 출범 등 일련의 대남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지도부는 적대지향적 태도와 공존지향적 태도를 동시에 표출하는 정세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제난·식량난 등 일련의 대내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북한 지도부는 경제난과 체제발전을 위해 제한적 개혁과 부분적·점진적 개방의 필요성을 표출함으로써 개혁지향적인 정세인식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요컨대 전환기 북한 지도부는 주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이데올로기 중시적 정세인식을 지속하되, 체제유지를 위하여 현실적응적 정세인식(대외개방 및 대

남공존의 필요성)도 동시에 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분석에 기초하여 북한 지도부 정세인식상의 主要 變化的 側面을 정리해보면, 국제질서관에 대하여 '혁명 이데올로기' 중시적 인식에서 '국가이익' 중시적 인식으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220] 또한 對4국관과 국제경제관 그리고 국제안보관에 있어서도 이데올기적 정세인식으로부터 다소 탈피하여 현실인정적 또는 현실주의적 정세인식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1] 대남·통일관에 있어서도 공세적 인식으로부터 방어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기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이 상당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되었다. 국제질서관과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는 종속론적 패러다임과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220) 북한 지도부는 외교노선에 있어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사회주의적 원칙과 동지적 협조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세계혁명 우선추구적 외교관'에서 '국가이익 우선추구적 외교관'으로 전환함을 보여주었다.

221) 미국을 '유일 초강국'으로 인정하고 중국에 대한 '혈맹'적 인식을 다소 약화한 것이 하나의 실례이고, 서방 자본주의 발전을 인정하고 대외무역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긍정적 태도를 취한 것이 다른 실례이며, 핵무기의 현실적 유용성의 한계를 표출한 것이 또 다른 실례이다.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22] 對4國觀과 국제경제관 그리고 국제안보관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적 인식을 지속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다.[223] 또한 대남·통일관에 있어서도 김영삼 문민정부를 '역대 군부독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연방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 기존의 통일관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탈냉전기 북한은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즉 김정일 정권이 지속되는 한 명목상의 혁명추구와 실제상의 실리추구의 二重的 認識(대외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인식과 현실적응적 인식을, 남북관계에서는 '공세적 체제방어' 또는 공존지향적 인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222) 북한 지도부는 '세계제국주의와 사회주의진영간의 대결'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사회주의의 실패는 '사회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주의와의 이념경쟁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 및 종국적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23)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고립·압살'적 이해,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경계, 러시아의 체제변화와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우려 등을 표출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의 파국적 결말이라는 레닌적 명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폐해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쟁불가피론적 인식과 군사력 강화론적 인식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 추세에 기초하여 향후 북한 당국이 추진할 정책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만 놓고 볼 때, 북한은 대담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 강화론'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직면한 과제(정권의 공고화와 경제난 해결·핵문제 해결과 대외관계 개선·국력의 상대적 열세 극복과 남북관계 재정립 등)의 압력 또한 크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정책 및 대남정책은 제한적 개방과 공존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탈냉전기 북한(김정일 정권)은 對內 強硬·對外 宥和 基調하의 消極的 對內 改革·積極的 對外 經濟開放政策을 채택하여 당면한 경제난과 외교난을 풀어감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대내정책에 있어서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노선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단계적 핵투명화 정책을 새로이 추진하고,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 및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되,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국제적 압력 및 대남체제경쟁의 부진을 호도하려 할 것이며, 경제난 타결과 대남교란을 위해 민간차원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

으로 예상된다.

2. 韓國의 對應政策 方向

한반도에는 지금 탈냉전적 국제조류와 냉전적 지역조류가 교차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와 '유인외교' 정책에 따라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심화될수록, 남북한간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한국으로서는 무엇보다 통일대전략을 신중하게 세우고, 이를 현실상황에 잘 조화시켜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가. 統一大戰略 樹立을 위한 3가지 前提

첫째, 統一問題의 二重構造的 性格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일문제는 4000만 한국 국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현상유지적 성격과 7000만 한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현상타파적 성격의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민족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국제문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통일문제의 국제적 비중이 증대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통일문제는 어떤 정권의 통치 및 정권 재창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및 민족의 번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轉換期的 認識을 가져야 할 것이다. 냉전적 상황에서는 냉전적 인식이 필요하고, 탈냉전적 상황에서는 탈냉전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계에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진영의 몰락으로 탈냉전적 조류가 흐르고 있으나, 동북아 및 한반도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및 북한의 건재에 따라 냉전적 조류가 교차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민족의 도약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우리로서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인식을 고집할 것도 아니고, 상황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탈냉전적 인식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전환기적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기적 인식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의 정세와 대남·통일전략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그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의 의도 분석에 연연하던 구태의 상황의존적 접근에서 벗어나, 어떻게 우리가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국가를 평화스럽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염두에 둔 목표지향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戰略的 思考를 가져야 할 것이다. 냉전기에는 제로섬 게임의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대응하는 반응적 사고와 정책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이 한민족의 노력에 따라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는 바, 보다 현실성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기조는 무엇인가? 한국정부의 단·중·장기적 목표는 무엇인가?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원칙은 무엇인가?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입장은 무엇이며, 양보할 수 있는 전술적 입장은 무엇인가? 의제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등이 보다 전략적으로 정립되어한다. 우리는 통일을 외치지 않고, 화해와 교류·협력을 먼저 실제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로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나. 統一大戰略의 基本方向

첫째, 「韓國型」 統一모델을 설정·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방안은 결국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 봉쇄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체제붕괴를 유도하고, 그 결과로서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포함시키는 참여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체제발전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서 남북한간의 합의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선택을 쉽게 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에 대답해 보아야 할 것이다. 봉쇄정책은 반드시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과 붕괴를 가지고 오는가? 아니면 안정과 지속을 가지고 오는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수반하는가? 아니면 개혁주의적 사회주의정권의 등장을 초래하는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 및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로 귀착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내란 및 주변 4국의 대북개입에 따른 제2의 구한말사태 나아가 주변 4국의 신탁관리지역으로의 전락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가? 따라서 한국은 '제2의 독일형 통일'이냐 아니면 「한국형 통일」이냐에 대하여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정책선택에 따라서만 통일과정과 양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 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대비책은 최악의 상황전개에 대비하는 별도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의 북·미 협상과 이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에 대해서는 主體的 對應과 戰略的 對應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한반도 영향력행사를 지속하려 하고,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비록 현실적 능력은 약하나 대남북한 균형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일본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소외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동북아에 대한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한은 냉전기에 추구하던 이데올로기 중시적 「진영외교」를 탈피하고, 경제실리 중시적 「유인외교」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현실상황을 도외시하고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근거한 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비중을 낮추고, 주변 4국의 이해다툼을 활용하는 주체적·전략적인 통일·외교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韓國의 統一·外交政策은 주변 4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명제를 수용한다면, 현단계 우리의 대응은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평화적인 체제경쟁을 통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에 대한 '평화적 이행'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다. 統一大戰略의 具體的 實踐方向

첫째, 韓半島問題의 국제화 비중을 낮추고, 한반도문제의 韓半島化 比重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개입여지를 최대한으로 축소시키고, 우리 민족 내부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나갈 수 있도록 비중을 높여가는 정책을 검토·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의도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소극적·수세적 차원에서의 대응정책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國家目標로부터 출발하여 北韓情勢와 國際環境의 흐름과 우리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주체적·포괄적인 통일정책(대내·대북·대외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내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대북정책으로서는 평화공존과 경제교류·협력을, 대외정책으로서는 주변 4국과의 선린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병렬적으로 통일문제들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시급성에 따른 우선 순위 설정과 현실적 가능성과 이상적 당위성 사이에서 최상(best)의 정책이 아니라 最適(optimal)의 정책을 모색하는 전략적 사고에 기초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핵무기개발의혹 해결문제

및 동북아 질서재편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핵문제에 대한 4자 3채널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에 있어 관련국가 참여 입장, 일본의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 우선적 확보와 이에 따른 대북 보상금 협의 입장, 러시아의 경수로 지원 및 8자회담 제안 입장, 그리고 미국의 대북 2단계 수교 입장 등을 잘 파악함으로써 친 외세나 반 외세가 아닌 용 외세적 자세에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을 더이상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통일을 이루어가는 同伴者로서 볼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1988년의 「7·7선언」 정신과 「3단계 통일방안」에 더욱 충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선언적 정책과 실제적 정책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만이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신뢰구축을 이룰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통일과정 및 이후 국가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통일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民間團體의 役割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남북이산가족 재회 및 납치어부 귀환 및 미전향 장기수 처리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경우 정부는 원칙론적 입장을 개진하고, 이의 처리는 민간단체에게 위임함으로써 남북 정부간의 불신을 극

복하는 동시에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인적 교류는 종교단체를 통하여서 물꼬를 트고, 통일 이후 과정에서는 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이기심의 억제를 도모함으로써 통일 후유증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91-01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의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93-03 中國의 改革·開放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2-06 軍備統制 檢證 硏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92-07 北韓住民의 人性硏究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硏究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92-11 東北亞 經濟協力의 發展方向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硏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硏究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3-02 金日成著作 解題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93-05 中·臺湾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93-15 金正日著作 解題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93-19 예멘 統合 事例研究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畵分析을 中心으로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93-25「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93-26 日本의 核政策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94-04 中·臺湾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擧制度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 展望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94-18

94-19 1994年度 統一問題 國民與論調査 結果

94-20「조선전사」解題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94-24 韓國 民族主義 硏究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쵸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옐찐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中心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의 發展方向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94-10 韓·러關系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94-18 美國의 中間選擧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論 叢〉

統一硏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硏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硏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硏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硏究論叢 第3卷 1號(1994.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 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 展望

研究報告書 94－1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롬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